

위험한 위드 코로나 추진하면서 민주노총 투쟁 비난 말라

관련 기사 12면



대장동 의혹
팩트체크로
균형 있게 보기

2~3면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 기고

노동자들이 불평등 확대와
상시적 재난에 맞서야

4면

미·중 갈등으로
위험한 화약고가 된
대만해협

5면

청년과 불평등 —
왜 청년들은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가?

6~8면

무인화 기술의 발달로
자본주의는
노동자 없이
굴러가게 될까?

9면

노동자 투쟁

SPC 화물 /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10면
CJ대한통운 / 학교비정규직 11면
현중 법인 분할 반대 활동가들,
법정으로 5면

대장동 의혹: 팩트체크로 균형 있게 보기

김승주

국민의힘 윤석열은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이 공동주범인 범죄 사건”으로 이미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주장한다.

원희룡은 우파 언론들이 “대장동 1타 강사”라고 띄워 준 덕분에 국민의힘 경선 4강 안에 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윤석열과 전 당대표 김종인도 원희룡의 ‘강의’ 영상을 칭찬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재명에 대한 국민의힘 등 우파의 공세는 거짓말, 꺾어맞추기, 위선으로 가득하다.

비자금? 재판가래?

원희룡은 화천대유가 이재명의 “비자금 출납 센터”라고 못 박는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가 그 돈으로 이재명의 “재판가래 게이트”를 뒷받침했을 거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 근거는 이재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경기지사직을 잃을 뻔했던 재판에서 권순일 전 대법관(화천대유 고문)이 무죄 의견을 냈고 당시 재판의 변호사 비용이 무료였다는 점밖에 없다.

단편적 사실들을 무턱대고 연결짓는 주장에 불과하다. 그 재판은 1심에서 이미 무죄가 나왔었다. 대법관들 사이에서 권순일만 무죄 의견을 낸 것도 아니었다. 게다가 권순일은 2014년 양승태가 추천해 박근혜가 임명한 대법관이었다.

또, 권순일이 김만배에 의해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된 것은 대법관 퇴임 후인 2020년으로, 이재명 대법원 재판(2019년) 이후다. 즉, 원희룡은 화천대유 고문료가 사후 뇌물이라고 주장하는 셈인데, 굳이 현금으로 몰래 전달하지 않고 왜 복마전의 본산으로 권순일을 불러들였는지 설명되지 않는다.

법조계 거물 30여 명으로 구성된 화천대유 고문단에는 친민주당 인사뿐 아니라 국민의힘 측 인사들도 있었다. 원유철(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한국당의 전 당대표이자 경기도가 지역구인 전 5선 국회의원), 이경재(박근혜 탄핵 국면 때 최순실 변호인) 등이 대표적이다.



박정희의 강남 개발부터 부산 엘시티까지 땅 놓고 돈 먹기로 재산 불린 “그분”을 찾고 싶으면 거울이나 보라

전 국민의힘 의원 광상도는 이미 화천대유와 엮인 사실이 드러났다. 광상도는 국민의힘 측이 직접 밝힌 “50억 약속 모임” 일원인데, 광상도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으로 받은 액수가 50억 원이었다. 그는 이재명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근무한다고 허위 폭로했었다.

국민의힘 등 우파는 이재명이 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결재자였다고 강조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비자금 조성설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지휘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유동규(화천대유로부터 뇌물 받은 혐의로 구속)가 이재명의 측근이라 해도 그것으로 이재명의 비리를 단정할 수는 없다.

결국 원희룡을 비롯한 우파들은 이재명 비리·부패 사건이라는 결론을 정해 놓고는 사실과 거짓, 밝혀진 것과 아직 안 밝혀진 것을 짜맞춰서 허위 공세를 펴고 있는 것이다.

재벌, 대형은행이 거둔 막대한 수익

한편, 우파들은 대장동 사업으로 SK 재벌과 하나은행 등 대형은행

이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여동생 최기원이 ‘킨앤파트너스’에 빌려 준 돈 626억여 원이 화천대유 초기 자금으로 대여됐다. 최근 보도를 종합하면, 최기원은 그 돈의 용처를 알고 있었고, 수익이 본격화한 2018년에는 연이율 25퍼센트이던 대여금이 투자금으로 바뀐다. 투자금으로 바뀌야 더 많은 수익을 올린다는 점이 그 시점 즈음 분명해졌기 때문일 것이다. 이미 수백억 원을 받은 그는 올해 말에 투자 배당 목적으로 약 1000억 원을 더 받을 예정이라고 한다.

대장동 건의 또다른 핵심 인물인 천화동인 투자자 정영학의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분”이 SK 총수 일가 중 하나를 뜻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는 이유다.

SK와 화천대유 사이에 하나은행이 있다. 하나은행은 대장동 개발 사업 주관사로, 컨소시엄을 꾸려 시행사 ‘성남의뜰’을 설립했다. 화천대유는 그 컨소시엄의 작은 일부였다. 그런데도 우파는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굳이 ‘화천대유 컨소시엄’이라고 부른다. 프레임 공작인 것이다.

하나은행을 비롯한 여러 대형은행들이 화천대유에 대출해 준 총액은 6300억 원이 넘는다(화천대유 감사보고서).

하나은행은 이 사업에 대한 대출을 주선한 수수료로만 총 300억 원을 챙겼는데, 이자 수익도 약 100억 원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은행이 주목받는 이유는 수익 규모 때문만이 아니다. 앞서 봤듯이, 이 사업의 초기 자금은 SK 총수 일가에서 나왔는데 하나은행은 SK그룹의 주거래은행이다.

민간개발 만세 부르던 자들의 위선

국민의힘은 민간 투기를 뒷받침한 은행들의 행태를 비판하는 척한다. 또, 이재명이 말로만 공공개발 강화와 투기 억제를 내세웠을 뿐, 실제로는 투기꾼들과 결탁해 비리를 저질렀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이는 뻔뻔한 위선이다. 이명박 정부와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은 대장동 개발을 공공사업으로 진행하려는 이재명의 시도를 좌절시키고 민간이 참여하게 만든 장본인이다.

무엇보다 역대 우파 정부와 그 후신인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부동산 불로

소득 환수에 반대하고, 규제 완화를 주장하며 땅부자들의 이익 보장을 중시해 온 자들이다. 그중 일부는 직접 나서서 더러운 방식으로 재산을 불려 왔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시작돼 한나라당 정치인들의 술한 부정부패가 드러났던 부산 해운대 엘시티(101층짜리 주상복합건물) 개발 사업에서 민간 투기꾼들은 조 단위의 개발 수익을 남겼다. 이 중 단 한 톨도 공공으로 환수되지 않았다.

반면, 이재명은 대장동 개발에서 수익의 상당 부분을 시 정부로 환수하고 공원도 지었다.

이재명은 대장동 사업에서 환수한 수익으로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시민배당’을 실시하려다가 민주당 안팎의 반대로 포기한 바 있었다.(지난해 은수미 성남 시장은 이 돈의 일부로 시 차원의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고 한다.)

물론 이번 사건에서 좌파 측에서 보기에 이재명의 정치적 약점과 한계가 드러나기는 했다. 투기 억제는 목표를 시장(기업이나 민간 투자자들)과 타협해 달성하려 했다는 점이다.

이재명의 대장동 개발 사업은 성남시와 하나은행 등이 우선적으로 수익을 배당받은 뒤, 추가 수익을 화천대유 등 민간 업체들이 챙기는 구조였다. 이재명은 부동산 가격 상승 전에는 성남시가 수익 중 일부를 확정해 받는 게 더 확실한 수익 환수 방법이었다고 주장하지만, 결국 막대한 이익이 투기꾼들에게 돌아가는 길은 열어 둔 셈이 됐다.

그러나 이런 정치적 비판과, 이재명을 비리·부패 정치인으로 몰아 일종의 파렴치범으로 찍어내려는 국민의힘 측 모략은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좌파라면 우파에 맞서 이재명을 방어하고, 우파가 반사이익을 얻지 못하게 해야 한다.

wspaper.org

더 많은 기사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모든 남성
잠재적 성범죄자인가?

올해도 ‘퇴근’하지 못한 노동자가 648명

산재 사망 빈발해도, 문재인 정부는 기업 우선

양호영

올해 1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 산재 사고로 노동자 648명이 집에 돌아가지 못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산재 사고 사망자를 20퍼센트 줄이겠다는 목표를 내놔었다. 그 목표에 따르면 사망자 수가 700명대 초반이 돼야 한다. 이미 실패가

명백해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꼼꼼한 산재가 발생할 때마다 입 발린 말을 늘어놓지만,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노동자 수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건설업은 산재 문제가 가장 심각한 업종이다. 2016년~2020년 산재 사망자 중 건설업 비율은 꾸준히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올해 1~6월 산재 현황을 봐도, 사고 사망의 절반이 건설업에서

벌어졌고 44퍼센트가 높은 곳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었다.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노후한 시설을 교체·보수하지 않아 벌어지는 사고가 비일비재하다.

최근에는 택배, 쿠팡 등 서비스 업종에서도 과로사가 늘어났다.

그런데 과로사가 산재로 승인받는

비율은 40퍼센트대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 5년간 과로사(뇌심혈관 질환 사망)로 산재를 신청한 수는 3042건이었는데, 이 중 산재 승인은 1205건밖에 되지 않았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는 참사가 벌어질 때마다 문재인 정부는 현장 특별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부산을 떨지만

실제 효과는 별로 없다.

특별감독을 받은 현장 3곳 중 1곳이 1년도 지나지 않아 중대재해가 다시 발생했다는 사실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폭로됐다. 기업주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솜털 같은 과태료를 납부한 후, 죽음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위험한 현장은 그대로 굴러간다.

▶ 3면으로 이어짐

대장동 몸통은 이재명? 변화 염원을 환멸에 빠뜨리려는 우파의 진흙탕 작전

김문성

내년 대선이 역대급 혼란에 빠져 있다.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와 우파 야당의 지지율 선두 후보가 모두 수사 대상이 됐다.

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지사는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건으로 배임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한 윤석열은 검찰총장 재임 시절 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형사고발을 사주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재명 수사와 윤석열의 청부 고발 의혹 조사를 맡고 있다. 윤석열 의혹 수사는 공수처가 총괄한다. 경찰은 둘 모두를 수사하고 있다.

특히, 대장동 문제가 최대 이슈가 돼 있다. 우파와 지배계급의 다수가 변화 염원 대중의 지지를 받는 이재명을 경원시하고, 그의 집권을 반기지 않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최근 2년 새 '정치 검찰'이 문제라고 두들겨 왔는데, 새삼 대선 국면에서 검찰의 행보가 주목받게 됐다.

물론 검찰 수사가 조만간 무언가를 밝혀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대선 국면에서 검찰이 유력 후보(여야를 가리지 않고)를 제대로 수사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검찰 수뇌부가 '미래 권력'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다. 1992년 김영삼·정주영, 1997년 이회창·김대중, 2007년 이명박 등이 대선 후보일 때도 그랬다. 결국 당선 가능성을 유지해야 검찰의 칼 끝을 피할 수 있는 (본질적으로) 정치 투쟁이다.

무엇보다 대장동 건에서 이 사회 체제의 진정한 수혜자들이 드러난 데다 검찰도 수혜 집단의 일부임이 드러났다. 화천대유의 초기 물주로 재벌(SK) 총수 일가의 이름이 나왔고, 고문 명단에서 고위 법조인들의 이름이 줄줄이 나왔다.

전직 대법관도 나왔지만, 법무부 차관과 검찰총장, 검사장 등 검찰 지휘부 출신 인사들이 여럿 나왔다. 그래서 수사를 제대로 할 가능성이 적다.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은 수사 부실을 보여 줬다.

대장동 건은 세 가지 점을 보여 준



10월 18일 경기도 국정감사에 참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다. 첫째, 설사 합법이든 불법이든 **자본주의 하에서 부동산 개발은 대기업들과 투기꾼들에게 막대한 수익을 안겨 준다**. 이들이 부동산 문제 해법으로 민간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수시로 강조하는 까닭이다.

둘째, 고위 공직자, 대기업, 브로커 등의 **부패 사슬이 아주 만연하고 공고하다**는 점이다. 특히, 각종 인허가를 받아야 하고,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을 끌어와야 하는 부동산 개발(투기) 사업에서는 더욱 그렇다.

셋째, 수천억 원 개발이익 환수라는 성과도 있었지만, **기업에게 투자 유인을 허용한 이재명식 민간합동 개발 방식의 한계(노동계급의 관점에서 볼 때)도 드러났다**. 이재명도 (다른 정치인들처럼)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가시적 성과를 만드는 데에 집중했던 듯하다.

좌파는 이 세 가지를 지적하되 균형 있게 맥락 속에서 다뤄야 한다. (한계도 드러났지만) 우파의 비난과 달리 이재명은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 대선 공약에서 대체로 투기 억제, 불로소득 환수, 복지 확대, 공공 주택 공급을 더 중시하는 기조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부동산 개발로 인한 불로소득의 보호자 구실을 해 온 우파가 이재

명을 흡집내 보려고 셋째 측면만 침소봉대하면서 아니면 말고 식으로 중상비방 공세에 열중하고 있다.

중상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 이재명을 견제하는 데 공을 들여 온 건 친문계의 핵심부였다. 그의 기반이 민주당 주류와는 다르고, 그의 언행이 은근히 비판적인 게 거슬렸기 때문이다. 대장동에서 개발 이익을 많이 환수한 게 성과라는 이재명의 발언이 허위라고 먼저 주장한 것도 친문 측이었다.

현 행정안전부 장관 전혜철(경철이 그 휘하에 있다) 등 친문 핵심부는 이재명의 사생활 문제를 법정으로 가져가 망신을 주고 경기지사직까지 뺏으려고 했다.

그러나 지금 친문 진영은 이재명을 두고 분열한 듯하다. 상당수는 이재명이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당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때문에 이재명 지지로 돌아선 듯하다. 그러나 민주당 경선 불복 해프닝이 보여 주듯이 긴장은 여전하다. 유동규 수사 문제에선 검찰과 경찰 사이에도 긴장이 있다.

지금은 우파가 대장동 문제로 이재명에 대한 파상 공세를 벌이고 있다.

그런데 찬찬히 뜯어 보면, 사실로 뒷받침되는 게 하나도 없다.

이재명 아들이 화천대유에 근무한다더니 거짓말이었고, 김만배가 이재명 측근이라더니 그것도 사실이 아니었다. 정영학·남욱·김만배·유동규 등과 이재명이 공모했다는 증거는 나오게 없는데, 개발의 결정권자였다는 이유로 몸통이라고 공격받는 것이다.

우파는 처음에는 수천억 원 배당을 받은 화천대유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고 묻더니, 지금은 또 “그분”(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를 가리킴) 논란만 키우고 있다.

그러나 우파들은 돈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에는 막상 별 관심이 없다. 화천대유에 초기 운영 자금을 댄 것(이것을 기초로 하나은행 등에서 사업자금 대출을 받음)이 SK 총수 일가 중 한 명이라는 정황이 진작에 나왔는데도 말이다(이후 막대한 수익을 거둠).

이처럼 우파는 대장동 사건의 실제적 진실에는 관심이 없다. 그저 진흙탕 개 싸움으로 ‘이재명 게이트’라는 이미지만 사람들의 뇌리에 남길 생각뿐인 것이다. 진흙탕 싸움으로 사람들에게 환멸을 주고 투표율을 떨어뜨려 우파 집권에 유리하게 할 책략이다. 진실이 오리무중일수록 더 좋다.

우파는 행여라도 이재명이 문재인인의 개혁 배신 행각 일부와 차별화된 말과 공약을 내놓아 변화 염원층의 지지를 끌어모으고 이들의 정치적 기대감을 높일까 봐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우파의 특검 요구를 지지해서는 안 된다.

강점이 약점 되다

문재인 재임 동안 민주당 인사들의 부패 행각과, 그것을 감추고 정당화하기 위한 추한 언사들이 많이 드러났다.

이런 부패와 위선은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 개혁 배신과 연관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부패 수사로 공정의 대표자 이미지가 형성된 윤석열이 부상했던 것이다.

물론 부동산 가격 폭등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만을 심화시킨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 대장동 개발 사업도 (이재명의 법적 책임이 없다 해도) 민간 투기꾼들과 대기업들이 막대한 이

익을 본 것 때문에 대중의 불만을 새삼 자극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중상 모략에 가까운 우파의 흠탕물 공세가 나름의 효과를 내는 듯하다. “억강부약”을 내세우던 이재명에게는 강점이 약점이 된 모양새다.

민주당 경선 후 이재명이 컨벤션 효과(정당이 대표나 공직 후보자를 떠들썩하게 선출하는 이벤트 후에 지지율이 오르는 현상)를 누리지 못한 것이 방증이다.

이재명이 검찰 수사에 발목 잡히면 문재인과의 좌파적 차별화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변화 염원 대중은 더 실망할 것이다.

우파가 상황을 교활하게 이용해 반사이익을 보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은 10월 18일과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 직접 출석하겠다고 했다.

비리가 없다면, 변화 염원 대중의 사기를 위해서도 정면 돌파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지금 대장동 건을 이용한 우파의 공세는 사회민주주의자 이재명의 약점을 침소봉대하고, 사실로 입증되지 않은 것을 사실인 것처럼 비방해 대중의 변화 염원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수작이다.

계급 불평등을 당연시하고 합리화하려고 해 대중의 분노를 산 조국 논란과는 엄연히 다르다.

정의당 좌파 등 일부 좌파가 ‘그놈이 그놈’이라는 식으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추상적 접근이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으로부터 팔시를 받았던 것은 여권에 대항한 대중 투쟁(특히 노동계급 투쟁)을 더 좌경화시키고 더 강화하는 것으로 보상받아야 한다.

또, 한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지지했던 것을 만회하려고 그 반대편으로 뛰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팬스레 급진적인 공문구와 슬로건을 제출하기보다 냉정한 전술·전략을 추구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선거적·의회적 선포성 과시가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계급 투쟁을 촉진하고 보편화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 2면에서 이어짐

이처럼 산재 사망은 계급 불평등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단면이다. 노동자의 목숨 값은 겨우 2000~3000만원에 불과한 반면, 확산도 전 국민의 힘 의원의 31살 아들은 산재 명목으로 50억 원을 퇴직금으로 받았다.

기업주들은 이윤 축적을 우선시해 노동자들의 작업 안전에 투자하기를

꺼린다. 노동자가 목숨을 잃거나 큰 부상을 당해도 낡은 기계 부품을 새로 갖다 끼우듯 새로운 노동자로 대체하기도 한다.

문재인 정부도 기업의 이윤 생산에 차질이 생기는 건 한사코 피하려 한다. 정부가 약속했던 중대재해법은 완전히 사기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주들의 불멘소리를 의식해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중대재해법을 후퇴시키고 난도질했다. 법을 제정할 때도 중대재해 대상을 협소하게 규정하고 경영자의 책임과 의무를 감면했다. 이도 모자라 9월 28일에는 과로사 질병 등을 직업병 범위에서 제외하고, 2인 1조나 근로기준법 준수 등을 경영자 의무로 적시하지 않은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렇게 누더기가 된 중대재해법은 2022년 1월 1일 시행되더라도 산재 기업주들에게 면죄부나 주게 될 것이다. 게다가 이조차 산재 사망의 81퍼센트가 벌어지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24년이나 시행된다.

문재인 정부는 반노동 기조를 분명히 하면서 민주노총을 탄압하고 SPC 파업 등 투쟁들에 강경 대처하고 있다.

경제 회복을 위해 노동자 서민의 불만을 억누르고 있는 것이다. 반면 재계의 불멘소리에는 적극 화답하고 있다.

노동자 목숨보다 이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기업들과 이를 비호하는 정부에 맞설 때만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다. 이윤 논리에 반대하면서 기층에서의 저항과 투쟁이 더욱 강력해져야 한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 기고 팬데믹과 기후 위기

노동자들이 불평등 확대와 상시적 재난에 맞서야

“누가 코로나19의 부담을 질 것인가? 문제는 바로 이것이다. 누가 삶이 더 편해졌고 누구의 삶이 더 힘들어졌는가?”

올해 9월 독일 연방선거에서 독일 좌파당이 내건 선거강령 맨 앞에 나오는 말이다. 이 질문은 한국 사회에도 잘 들어맞는 말인 듯하다.

OECD 국가 중 일상적으로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검사·추적·격리(‘제로 코로나’ 정책)를 시행한 다섯 나라(호주, 뉴질랜드, 한국, 일본, 아이슬란드)가 느슨한 방역 정책(‘위드 코로나’ 정책)을 시행한 나라들보다 사망률은 25배나 낮고 경제성장률은 더 높았다고 한다. 한국도 상대적으로 방역에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이 다섯 나라 중에서 한국은 유독 재정 지출을 작게 한 나라다.

뉴질랜드는 GDP의 19.3퍼센트, 호주는 18.4퍼센트, 일본은 16.5퍼센트를 썼고, OECD 국가는 아니지만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편 대표적 국가인 싱가포르가 18.4퍼센트를 썼는데, 한국은 GDP의 4.5퍼센트만을 썼다. 한국 GDP가 2000조 원쯤이니 다른 나라들보다 약 180조 원을 덜 쓴 것이다. 애초에 불평등한 한국이 더욱 불평등해질 수밖에 없었다.

국내 500대 기업의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은 지난해보다 100조 원 이상 늘어났다. 반면 청년 확장실업률을 보면,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 22퍼센트였던 것이 올해 들어 29퍼센트로 급증했다.

필수 노동자들은 박수만 받았을 뿐 노동조건 개선이나 인력 충원은 거의 없었고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됐다. 자영업자들은 반란을 일으켜야 한다고 얘기할 정도다. 자영업자들이 거리로 나와야 할 정도라면 이들이 고용했던 노동자들은 어떻게 됐을까?

고용, 소득, 사회보장, 주거 등 모든 생활지표가 나빠졌다.

사망률과 경제성장률을 보면, 한국의 대응은 상대적으로 성공한 게 맞다. 그러나 그 과실은 대기업이 가져갔고, 노동자·서민의 삶은 더욱 팍팍해졌다.

누가 코로나19의 부담을 졌는가? K-방역의 성공은 노동자·서민을 갈아 넣어 만든 것이다.

직장과 집회에서 어느 쪽이 더 안전한가

그러나 노동자·서민이 팍팍해진 삶을 개선하라고 호소할 권리는 금지돼 왔다. 건강보험콜센터 집회를 보자. 이 노동자들의 원주 집회는 하루 전에 금지 통고를 받았다. 심지어 우파 언론들은 집회로 모이려는 노동자들은 좀비에 비유했다.

건강보험콜센터 노동자들은 코로나 시기에 사람 목숨을 지키는 필수 노동자이다. 이들은 말로는 박수를 받는 노동자였지만 그들이 자기 권리를 주장



팬데믹의 근원 농축산 기업들의 열대 우림 파괴로 인간과 박쥐가 맞닥뜨리게 될 기회가 많아진 것이 팬데믹 창궐의 배경이었다. 인도네시아 파푸아 섬에서 포스코가 팜유 농장을 조성하려 27,000헥타르에 이르는 열대 우림을 파괴한 모습

하는 순간 좀비가 됐다.

“우리는 파업하고 집회하는 게 직장에 있는 것보다 훨씬 안전해요”.

건강보험콜센터 노동자들이 집회 금지를 통보받은 후 한 말이다. 실제로 올해 5월까지 콜센터에서 발생한 코로나 집단감염만 23번이고, 감염자만 630여 명이다.

작업장은 코로나에 위협했다. 자본가들이 방역을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물류센터에서는 계속해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다시피 했고, 부천물류센터는 한 달에 2번 문을 닫은 적도 있지만 기업주가 처벌받지 않았다. 반면 민주노총 위원장은 발생하지도 않은 코로나 감염으로 구속됐다.

지금까지 집회에서 코로나 집단감염이 일어난 단 한 건, 지난해 8.15 태극기 집회 560명이 유일하다. 이 집회는 사랑제일교회 확진자들이 참여했고, 마스크를 안 쓰는 등 방역수칙을 깬그리 무시했다는 점에서 예외적이었다. 그리고 이 500여 명이 집회에서 감염된 사람들의 전부다.

민주노총의 어떤 집회에서도 감염자가 없었고 다른 어떤 집회에서도 감염자가 없었다. 태극기 집회가 유일한 사례인데 이렇게 쳐도 집회 감염자는 전체 감염자 34만여 명의 0.16퍼센트다. 그러나 정부는 모든 집회에 금지 조치를 내렸다.

설사 집회에서 코로나에 감염될 위험이 있다고 치자. 1908년 뉴욕의 여성 노동자들이 왜 굶고 있는데 파업을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한 말이 있다. “우리는 일해도 굶고, 파업을 해도 굶는다”.

노동자들은 직장에서 코로나에 더 위험하다. 올해 7월 가장 코로나가 가장 극심했을 때 서울 코로나 감염자의 35퍼센트가 직장 감염자였다.

위드 코로나와 ‘터널의 끝’

문재인 정부는 지난 5월 취임 4년 연설문에서 이제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말한 바 있다. 백신 접종이 끝나면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말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예견된 바이러스 변이 때문에 백신의 효율은 시간이 지나면서 60~80퍼센트까지 떨어지는 것이 밝혀졌다. 전 국민의 80퍼센트가 백신 접종을 완료해도 효율이 80퍼센트이니 64퍼센트밖에 면역이 없다. 집단면역은 불가능한 것이다. 위드 코로나의 대표적인 영국에서는 매일 100~2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다.

지금 시기는 ‘터널의 끝’이 아니다. 처칠을 인용하자면, “끝이 아니며 ‘끝의 시작’도 아니다. 굳이 말하자면 ‘시작의 끝’일 뿐이다”.

인구의 70~80퍼센트가 접종을 완료하더라도 진짜 일상으로의 복귀하기까지는 앞으로도 몇 년이 걸릴지 모른다. 주기적 급증과 사망자 행렬도 계속될 것이다.

세계로 눈을 돌리면 상황은 더 절망적이다. 지금까지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은 사람은 세계 인구의 47.5퍼센트로 절반이 채 안 된다. 최빈국에서는 1번이라도 접종을 한 사람은 2.7퍼센트에 불과하다. 이 속도로는 2025년 에야 전 세계 백신 접종이 끝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다.

옥스팜이 올해 4월에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백신 수익으로 새로 억만장자가 된 9명이 빈 돈만 있으면 전 세계 최빈국 사람들에게 백신을 두 번 접종을 할 수 있다고 한다. 또 이미 억만장자였던 8명과 그 가족들이 백신으로 빈 돈만으로도 인도 인구에 맞먹는 12억 명에게 2번 접종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전 세계의 한편에서는 인류 절반이 백신을 구경도 못 하고 있는데 다른 한편

에서는 백신으로 천문학적 이익을 쌓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백신에 대한 지적재산권 면제 요청은 WTO에서 통과되지 않는다. 백신 기업들과 이들을 지지하는 정부, 그리고 특허와 지적권이 이익의 원천인 몬산토 등 농축산 기업(종자의 특허)과 구글, 삼성전자,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기업들 때문이다.

반복될 팬데믹과 기후위기

그런데 더욱 전망을 어렵게 하는 것은 코로나 팬데믹이 마지막 팬데믹이 아닐 것이라는 점이다. 세계보건기구가 예상한 팬데믹 후보 목록 중 코로나19는 맨 마지막에 이름도 없는 8번째 질병(“질병 X”)이었다.

많은 질병학자들이 앞으로는 팬데믹 발생 주기가 더욱 짧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3년에 한 번씩 팬데믹이 올 것이라고 예상한 학자도 있다.

문제는 팬데믹의 원인이다. 박쥐는 포유동물인데도 바이러스를 자신의 몸에 많이 지니고 있다. 포유동물로서 날아야 하니 신진대사율을 높여야 하고, 그래서 체온이 40도 정도로 높다. 많은 바이러스와 함께 공생할 수 있게 된 이유다.

원래 박쥐는 인간과 만날 일이 많지 않다. 그런데 거대 농축산기업들이 플랜테이션 농업으로 전 세계에서 열대 우림을 파괴하는 것, 도시와 도시 사이에서 공장식 농장을 확대시키는 것과 비례해, 박쥐와 인간이 맞닥뜨리게 될 기회가 많아졌다. 인간이 키우는 가축은 밀집·밀집·밀폐된 ‘3밀 상태’에 있고, 이 속에서 바이러스는 최적의 변이와 번식의 기회를 갖게 된다.

그러자 박쥐에게 있던 바이러스가 인간과 인간이 키우는 가축으로 더욱 자주 넘어온다. 사스와 메르스에 이어, 코로나19가 코로나 바이러스로는 셋째로 종간 장벽을 넘어섰다. 코로나바

이러스만이 아니다. 에볼라나 니파 바이러스가 바로 이러한 경로를 통해 인간에게 역병을 일으켰고, 다음 번 팬데믹 후보 목록 맨 위에 있다.

자본주의적 공장식 축산업은 이미 신종플루와 조류독감으로 팬데믹의 근원이 될 능력을 보여 준 바 있다.

그런데 화석연료 기업과 더불어 거대 농축산기업들이 바로 기후 위기를 불러온 또 하나의 원인이기도 하다.

상시적 재난의 시대

기후 재난이 궁극적으로 인류의 멸종을 불러온다고 해서 그것이 마치 형성 충돌처럼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 인류가 모두 한꺼번에 사망하는 이벤트가 벌어진다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호주와 유럽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 규모가 커진 태풍과 허리케인, 심각해진 황사와 대기오염, 기후 위기로 인한 감염병 증가, 식량 위기 등 여러 기상 이변과 재난들이 늘어나고 희생자가 점점 늘어나는 것이다.

당장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2020년 한 해에만 450만 명이었다. 팬데믹으로 인한 사망자수보다 훨씬 많다. 기후 위기의 규모는 팬데믹보다 훨씬 크며 그 피해도 더 크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에서 잘 드러난 것처럼 재난은 결코 평등하지 않다. 팬데믹보다 훨씬 큰 재난이 계속해서 발생한다고 생각해 보라. 지구상의 약자들이, 또 한 국가에서 약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본다. 자본가들과 부자들은 기후 위기를 맨 마지막까지 피할 수 있다. 반면 노동자·서민은 기후 위기의 재난들을 맨 몸으로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마치 코로나19처럼 말이다.

기후 위기는 자연 재난으로만 오는 것도 아니다. 팬데믹처럼 경제 위기로, 그리고 나아가 군사적 갈등 심화로 발전해 사회적 재난, 군사적 분쟁으로 찾아올 것이다.

정치인들과 기업가들의 팬데믹 대응이 철저히 무능했던 것처럼 앞으로의 기후 재난에 대해서도 이들은 모든 것을 해결할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

코로나19, 기후 재난으로 가장 고통을 당할 사람들이 바로 노동자이고 그것을 진정으로 해결할 힘을 갖고 있는 것도 노동자들이다. 민중의 호민관으로서, 전 인류를 재난에서 보호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나서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추천 책

코로나19, 자본주의의 모순이 낳은 재난
마이크 데이비스, 알렉스 캘리니코스, 마이클 로버츠, 우석균, 장호중 외 지음
장호중 엮음, 책갈피, 244쪽, 12,000원

미·중 갈등으로 위험한 화약고가 된 대만해협

김영익

최근 대만해협의 긴장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대만 국방장관 추귀정은 현 상황이 “내가 군에 들어온 뒤 지난 40년 동안 가장 엄혹하다” 하고 말했다. 그리고 이 긴장은 위험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이다.

10월 1~5일 중국 전투기와 폭격기 등 150여 대가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 특히, 10월 4일에는 무려 56대가 진입했다. 대만 전투기도 연일 대응 출격했고, 대만의 미사일방어시스템도 가동됐다.

이때 대만 동쪽과 남쪽 해상에서는 미국·영국·일본·캐나다 해군 등이 참가하는 대규모 연합훈련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 훈련에는 항공모함이 3척이나 동원됐다. 중국 군용기들은 이 훈련을 겨냥해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

7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바이든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미군 특수부대와 해병대가 대만에서 최소 1년 이상 군사 훈련을 위한 비밀 작전을 수행해 왔다고 보도했다.

대만을 자국의 일부로 간주해 온 중국 정부로선, 대만에 (아무리 적은 숫자라도) 미군이 있다는 사실은 매우 민감한 문제다. 그럼에도 바이든 정부는 이를 의도적으로 언론에 흘려 시진핑 정부에 경고를 보냈다.

이런 갈등은 대만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얼마나 악화돼 있는지를 보여 준다.

엄혹

대만 문제를 놓고 시진핑 정부의 언사는 계속 강경해지고 있다. 10월 9일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은 이렇게 말했다. “누구도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을 수호하려는 중국 인민의 확고한 결심과 의지, 강한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미국과 대만을 향해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반면 대만의 차이잉원 정부는 “중화민국[대만의 국호]은 독립적인 주권 국



연합 훈련을 위해 서태평양에 집결한 미·영·일 등의 해군 함정들

가로, 중국의 일부가 아니다” 하고 응수했다.

대만 총통 차이잉원은 미국 외교 전문지인 <포린 어페어스>에 기고한 글에서 대만의 자유민주주의가 “이데올로기 충돌의 최전선”에 있으며, “대만이 무너지다면 그 결과는 지역 평화와 민주주의 동맹 시스템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했다.

차이잉원은 중국 권위주의에 맞서 ‘민주주의 동맹’을 강조하는 바이든 정부에 호응하면서, 자국에 대한 서방 제국주의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대만해협의 긴장이 이렇게 높아져 온 것은 바이든 정부의 대중국 공세와 관련 있다.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중국을 적대하면서 중국의 도전을 꺾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이 점은 미국의 대만 정책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앞서 전임 트럼프 정부는 대만에 대한 무기 수출을 크게 늘리는 등 중국의 반발을 무릅쓰고 대만과의 관계를 심화시켰다.

바이든 정부도 이런 방향에서 트럼프 정부와 다르지 않다. 바이든은 정부 관리들에게 대만 정부 관리들과의 접촉을 장려하는 지침을 내렸다. 그리고 1979년 이래 처음으로 대통령 취임식에 대만 대표를 초대했다.

또한 미국과 대만은 중단됐던 무역투자기본협정 협상도 재개하기로 했다.

미국이 영국, 호주와 새로운 군사동맹체 오커스(AUKUS)를 결성하기로 한 것도 중국을 자극했다. 미국과 영국은 오커스를 결성하면서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지원하기로 했다. 미래에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은 미군과 함께 대만 인근 바다에서 중국군을 감시하게 될 것이다.

오커스

일본도 대만 문제에 적극 관여하려 한다. 일본은 아시아에서 미국에게 가장 중요한 동맹이고, 대중국 정책에서도 중요한 파트너다.

지난 5월 자민당 외교부회의 대만 정책검토프로젝트팀은 대만 유사시에

대비하려면 ‘법적 정비’를 서둘러 마쳐야 한다고 했다. 대만 위기를 대비해 ‘전쟁할 수 있는 국가’ 일본을 완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민당은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현재 국내총생산의 1퍼센트 수준인 방위비를 2퍼센트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미국 바이든 정부의 공세에 중국도 반격하고 있다.

당장 대만 문제에서 중국 시진핑 정부는 미국에 줄기차게 경고해 왔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군용기 출동 같은 무력 시위로 미국 등의 군사 행동을 견제해 왔다.

지난 7월 중국 외교부장 왕이는 미국 국무부 부장관 웬디 셔먼에게 미국이 절대 넘어서는 안 될 ‘레드 라인’을 제시했다. 거기에 대만 문제가 포함돼 있었다.

물론 최근 미국과 중국은 고위급 회담을 가졌고, 바이든과 시진핑의 연말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도 거론된다. 그리고 무역전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과 중국 양측은 경제적으로 상호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군사와 경제 모두에서 미국에 가장 위협적인 경쟁자다. 패권을 유지하려는 기존 강자와 신흥 강자 사이의 적대는 쉽사리 해소되지 않고 한동안 계속 악화될 것이다.

미국과 중국 모두 지금 당장 대만해협에서 서로 전쟁을 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결코 상대방보다 약한 모습은 보이지 않으려 한다.

당장 바이든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철군 등으로 미국이 약해졌다고 중국이 ‘오판’하지 않을까 염려한다. 중국도 대만 문제에서 밀릴 때 받을 국내외적 타격을 의식한다.

이렇게 상대방을 겨냥한 군사 행동으로 계속 대립하다 보면 돌발 변수가 튀어나올 가능성도 커진다. 대만 국방장관도 “민감한 대만해협 전란에서 ‘오폭’ 위험이 높다”고 경고했다.

과거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이런 사건이 종종 일어났다. 1999년에는 미군이 세르비아를 폭격하다가 현지 중국 대사관을 ‘실수’로 폭격했고, 2001년에는 미군 정찰기와 중국 전투기가 중국 남부 하이난섬에서 공중 충돌한 일도 있었다.

과거의 사건들은 크게 번지지 않고 수습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 미국과 중국의 갈등과 경쟁 양상은 그때와는 매우 달라져 있다. 머지않은 미래에 대만해협에서 위와 비슷한 일이 벌어진다면 그 파장은 과거와는 상당히 다를 것이다.

이처럼 오늘날 대만해협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화약고가 된 것은 미국과 중국의 제국주의 갈등 때문이다.

바이든 정부의 대만 정책은 대만해협에 엄청난 긴장과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 맞선다고 해서 중국을 진보적으로 채색해서는 안 된다. 중국이 대만을 차지한다면, 이는 중국 제국주의의 대외적 힘이 강화되는 것일 뿐이다.

대만해협 불안정을 키우는 미국과 중국 두 제국주의 모두에 반대해야 한다.

현중 법인 분할 반대 투쟁 vs 검찰 산재사망에 면죄부 주고, 노동자 투쟁에 실행 구형

권준모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대의원

10월 15일 울산지방법원에서 현대중공업 법인 분할 저지 투쟁 참여로 기소된 노조 활동가들의 재판이 열렸다. 2019년 5월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인수와 노동조건 압박을 위해 회사 법인을 분할했다. 노동자들은 이를 막으려고, 법인 분할을 결정하는 주주총회 장소를 점거했다.

이에 맞서 회사는 노동자들을 고소·고발했고 이에 따라 재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10명에게 특수재물손괴

치상, 특수상해, 특수건조물침입,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검사는 박근태 전 지부장에게 징역 3년, 정병천 전 조직정의실장에게 징역 3년, 백호선 조선2분과장에게 징역 2년 등 9명에게 징역 10월에서 3년까지 실형을 구형했고, 1명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법인 분할 저지 투쟁은 왜 일어났는가? 대우조선 인수합병은 또 다른 구조조정을 부르고 법인 분할은 노동자들의 처지를 악화시킬 수 있었다. 실제로 그 뒤로 사측은 임금 억제, 생산성

향상 등 조건 악화를 위협하며 노동자들을 거둬 압박했다.

한편, 검찰은 얼마 전 현대중공업에 안전조치 위반과 산재사망 사고의 책임을 묻는 재판에서, 현대중공업 사장 한영석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안전수칙 미준수 혐의만 적용해 벌금 2000만 원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구형했다.

또한 정부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하고, SPC 화물 노동자 투쟁을 비난하고 경찰을 동원해 탄압했다.

또, 청주 F-35 반대 운동가들을 일

종의 간첩으로 몰아 구속했다.

반면, 삼성 이재용은 가석방하고,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중대재해법을 무력화하는 시행령을 통과시키며 노골적으로 친기업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 같은 문제인 정부의 행보 속에서 사측은 한영석이 면죄부를 받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를 부회장으로 승진시켰다.

10월 20일 민주노총 파업과 집회 이후 더 많은 노동자들이 정부와 사용자에게 노동자들의 저항 의지를 입증해 보이면 좋겠다.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세계적 마르크스주의 석학
알렉스 캘리니코스 초청 강연

미국 vs 중국,
신냉전?

10월 21일(목) 오후 8시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명예교수이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
주요 저서로는 <제국주의와 국제 정치경제>,
<카를 마르크스의 혁명적 사상> 등이 있다.

※ 전문 통역사의 순차 통역이 제공됩니다.



참가 신청하기
bit.ly/meeting1021



문의: 02-2271-2395, 010-4909-2026(문자 가능)

청년과 불평등

— 왜 청년들은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가?

양효영

이 글은 10월 14일에 열린 노동자연대 주최 온라인 토론회 ‘청년과 불평등 — 왜 청년은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가?’에서 필자가 발표한 내용을 보강한 것이다.

한국인 10명 가운데 6명이 자식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가난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최근 발표됐다(퓨리서치). 이런 비관적인 응답 비율은 2013년 이래로 최고치였다.

오늘날 청년의 팍팍한 삶과 어두운 미래를 생각해 보면, 비관적 응답이 빠르게 늘어난 게 놀라운 일은 아니다. 이것은 단지 막연한 걱정이 아니다. 현재 경제 활동을 하는 20대 청년 가운데 70퍼센트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여 년 동안 청년 실업, 빈곤, 주거난 등 청년층의 열악한 처지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다.

특히 청년 실업이 매우 심각한 문제다. 청년확장실업률은 2015년 21.9퍼센트를 기록한 이래로 계속 올라서 2020년에 25퍼센트를 돌파했다.(확장실업률은 구직 단념자와 불안정 취업자까지 포함된 것으로 그나마 현실적 지표로 여겨지는 통계다.) 학업을 마친 청년 중 적어도 150만 명은 일자리를 얻지 못한 상태인 것이다.

취업난이 심각하자 청년들은 열악한 일자리라도 붙잡게 됐다. 올해 5월 청년 취업자 수가 약간 늘었는데, 배달업 같은 단순노무직이 5만 명 증가한 것이 이를 견인했다.

기업은 청년들의 이런 처지를 이용

해 열악한 임금과 노동조건을 강요한다. 그래서 청년층 73퍼센트가 첫 일자리에서 20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다. 학자금 갚기, 주거 마련 등으로 허덕이는 청년들은 이미 20~30대에 1인당 7000만 원의 부채를 안고 있다.

20~30대 청년들이 열악하고 위험한 노동환경에서 일하다 사고로 숨지는 일도 끊이지 않는다. 얼마 전 인천에서 고층 아파트 유리창 청소를 하던 20대 청년이 보조줄도 없이 일하다 20미터 높이에서 추락사하는 참사가 벌어지기도 했다. 18세에서 24세 청년층 산재 사망 1위가 배달 노동인 것(2016~2019)도 이런 열악한 현실을 보여 준다(한정애 의원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청년층의 삶은 더 악화했다.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실업이 크게 늘었는데, 청년층에게 그 타격이 컸다. 청년층이 많이 유입돼 있는 서비스직에서 일자리가 크게 줄고,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취소하거나 줄였기 때문이다. 청년확장실업률이 올해 1~2월에 27퍼센트로 치솟아 2015년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이처럼 오늘날 청년들은 좁디좁은 취업문을 향한 무한 경쟁, 실업과 빈곤, 열악한 노동조건 등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청년들의 정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이 이를 더 악화시켜서, 지난해 우울증 진료 인원 증가율이 20대에서 가장 높았다(23.6퍼센트 증가). ‘코로나 블루’로 인한 청년층 자살도 큰 사회적 문제가 됐다.



심각한 취업난과 불평등 오늘날 대다수 청년은 좁디좁은 취업문을 향한 무한 경쟁, 실업, 빈곤,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린다

청년은 왜 이렇게 빈곤해졌나?

청년들은 왜 이런 처지로 내몰렸을까? 우선, 2008년 세계경제 위기가 청년 세대에 큰 타격을 미쳤다. 2008년 미국발 세계경제 위기 이후 기업주들은 신규 인력을 뽑지 않고 기존 인력을 ‘탄력적으로’ 쥐어짜는 방식으로 위기에 대응했다. 각국 정부는 기업 살리기에 돈을 쏟아부으면서 복지는 축소했다. 이런 방식은 특히나 청년층에게 크게 불리했다.

경제 위기 이전인 2007년 전 세계 청년 실업자는 6900만 명이었으나 2009년 7500만 명으로 늘어났다. 이 경제 위기 여파로 2011년 전 세계 곳곳에서 대규모 저항이 벌어졌다. 튀니지에서 가난한 청년 부아지지의 분신으로 시작된 튀니지 혁명이 이집트 혁명으로 이어졌고, 아랍 전역의 혁명으로 확산됐다. 미국에서도 청년들이 일자리, 교육, 의료를 요구하며 월가를 점거했고, 스페인에서도 청년들이 주축이 돼 ‘분노한 사람들’ 광장 점거 운동이 벌어졌다. 이 세계적 저항을 촉발한 중요한 불만이 바로 청년층의 실업과 빈곤이었

다.

역동적으로 성장해 오던 한국 자본주의도 1997년과 2008년에 큰 위기를 겪었고,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1970~1980년대 한국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노동력을 빨아들이던 시절과 달리, 이제는 경제의 활력이 저하되고 일자리 창출도 줄어들었다.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고용 감소는 생산성 증가의 결과이기도 하다. 10억 원 재화를 생산할 때 유발되는 취업자 수(취업유발계수)는 2000년 평균 26명에서 2019년에는 10명으로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다.

이런 주기적 경제 위기와 실업 확대는 자본주의에 불박여 있는 풍토병이다. 그런데 역대 우파 정부들은 버랑 끝에 내몰린 청년을 대놓고 비난하며 청년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이명박이나 박근혜는 특하면 청년의 “눈높이가 높다”고 비난했다. 너도나도 대기업만 가려 해서 청년 실업률이 높다는 식이었다. 또, ‘대학에 꼭 가야 하냐’며

대학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고졸 취업 활성화 대책 등을 내놓았다. 그렇게 해서 확대된 특성화고 현장 실습생과 고졸 취업자들은 어떻게 됐을까? 최근 수중에서 선박을 청소하다가 사망한 현장 실습생이 모든 것을 말해 준다.

문재인 정부는 청년 문제에 대해 말잔치는 많이 했지만, 실질적 개혁은 제공하지 않았다. 특히 일자리 문제가 중요한데, 이 정부가 내놓은 청년 일자리는 대체로 고용 수치 개선만을 노린 6개월짜리 저임금 일자리였을 뿐이다.

오히려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은 2020년에 신규 채용이 크게 줄었다(6000명 감소). 노동 인력이 넘쳐나서 그럴까? 전혀 아니다. 공무원들은 인력 부족으로 과로사 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얼마 전 인천에서 보건소 공무원이 자살했는데 그는 일주일에 70시간씩 일했다고 한다. 그의 동료들은 한 달에 초과근무만 100시간씩 했다.

심화된 불평등

평범한 청년들은 내일이 오늘보다 나으리라는 희망이 별로 없다고 느낀다. 특히 아무리 ‘노오력’해도 극복할 수 없는 격차, 불평등 때문에 절망한다.

실제로 한국 사회의 불평등은 빠르게 악화했다. ‘세계불평등데이터베이스’가 내놓은 2016년 통계를 보면, 상위 10퍼센트가 전체 소득의 43퍼센트를, 전체 부의 65.7퍼센트를 차지했다. 부와 특권은 상속으로 대물림된다. 최근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30대 하위 20퍼센트의 자산이 2000만 원인데 상위 20퍼센트는 8억 원이 나왔다.

광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서툰한 살 아들이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은 것은 이런 불평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또, ‘공정 어찌구’ 하던 조국 전 법무장관도 자식 출세를 위해 계급 특권을 이

용했다.

어떤 사람들은 불평등의 심화가 ‘세습 자본주의’의 등장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불평등은 특정 유형의 자본주의 때문이 아니라 자본주의 작동 방식의 결과다. **마르크스가 말했듯이, 자본주의 착취 체제 때문에 한쪽에는 부가 쌓이고 다른 한쪽에는 빈곤이 쌓인다. 이윤을 회복을 위해 취해진 위기 대응 조치들(부자 감세, 규제 완화, 복지 삭감 등)이 빈부 격차를 늘린 것만 봐도 자본주의 논리가 불평등을 일으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계층 이동 사다리가 거의 사라진 것도 자본주의가 세대를 거듭해 발전하면서 계급 분단이 공고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처럼 개천에서 용 나가기 어려운 것이다. 이처럼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은 결국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이자 계급 문제이다.

청년 문제 대안으로 제시되는 해결책들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의 대물림을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신분제 세습 자본주의”를 비판했고,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도 세습 문제를 비판했다.

이들은 청년들에게 출발선이라도 동일하게 맞춰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취지에서 기초자산제, 기본소득 등 여러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기초자산제는 토마 피케티가 불평등 해소 방안으로 내놓은 것으로, 25세가 되는 청년에게 1인당 평균 자산의 60퍼센트인 12만 유로(1억

5800만 원)를 주자고 해서 관심을 끌었다. 기초자산제는 단지 소득 차이만이 아니라 부의 분배를 주목한다는 점에서 급진적인 측면이 있다.

이런 아이디어에 착안해 심상정 후보도 특정 연령이 된 청년에게 3000만 원씩 주는 청년기초자산제를 제안했다.

그러나 이런 수준의 기초 자산은 열악한 처지의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지라도, 제한적이고(많은 청년은 3000만 원을 학자금 갚는 데 써 버리기 십상일 것이다) 불평등 개선 효과는 미미하다.

설사 청년들에게 상당한 수준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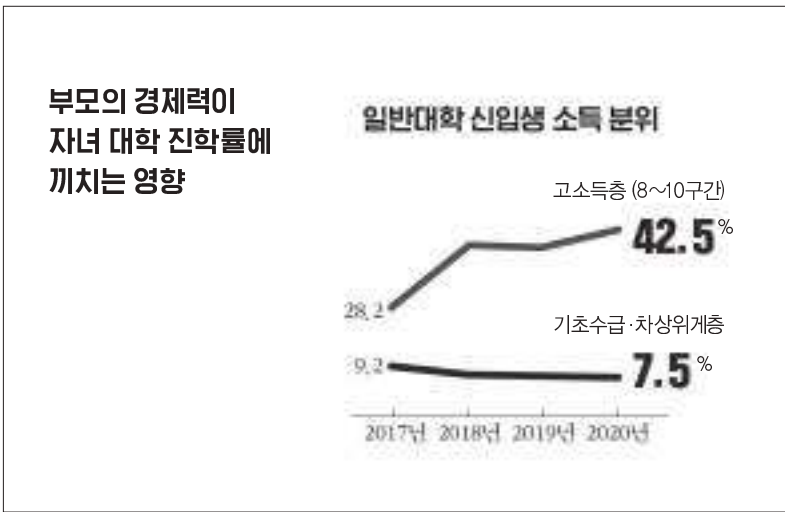
기초 자산을 준다고 할지라도, 경쟁 시스템이 지속되는 한 승자와 패자가 생길 수밖에 없고 불평등은 다시 커질 것이다. 자본주의 착취 체제가 지속되는 한 대다수 청년은 노동계급이 돼 착취를 받아야만 하고, 생산수단을 소유한 극소수의 손에 부가 집중되는 경향은 계속될 것이다.

누구는 청년 창업을 부추기기도 하는데, 자본의 집중이 엄청난 현실에서 구멍가게가 버티기 힘들다는 건 청년들도 잘 안다.

어떤 사람들은 교육 기회를 확대해 개인들이 경쟁력을 높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불평등의 고착과 세

습을 해소하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문제는 교육이 사회적 지위에 작용하는 정도보다, 사회적 지위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크다는 점이다.

교육 기회에 보장을 강조해 온 문재인 정부하에서도 사회적 지위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더 커졌다. 부모의 경제력이 대학 진학률에 크게 영향을 미쳐서 2017~2020년 3년간 4년제 대학에서 차상위계층 비중은 줄어든 반면, 고소득층인 8~10구간 학생 비중은 무려 28퍼센트에서 42퍼센트로 훌쩍 늘었다.



한편, 청년 문제를 세대 간 갈등 문제로 보면서 청년 정체성을 강조하는 흐름도 있다. 청년 유니온 같은 청년 당사자 운동이 한 사례다. 청년 문제를 더 넓은 계급 문제와 연결시키지 않고 협소하게 세대 정체성 문제로 규정하면, 그 정체성을 가진 개인들이 높은 자리로 가서 나머지 청년들을 대변

하겠다는 개혁주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쉽다.

실제 이런 운동은 종종 정부나 주류 정당의 위원회에 참여하거나 청년 할당제를 통해 간부직이나 국회의원에 진출하는 것으로 귀결되곤 했다. 그러나 이것이 평범한 청년 다수의 처지를 개선하는 개혁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세대 문제?

기성세대가 일자리나 복지를 다 챙겨가서 청년층이 불평등의 희생자가 됐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온다. 기성 언론들은 MZ세대와 586세대 간 갈등에 관한 기사를 쏟아낸다.

하지만 조금만 살펴보면 이런 대립 구도가 허구적임을 알 수 있다. 한 가정으로 본다면 부모가 자식 몫을 가로채고 있다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물론 오늘날 청년 세대가 기성세대에 비해 더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앞서 살펴봤듯이, 자본주의 경제 위기와 이윤율 회복을 위해 권력자들이 취한 조치 때문이지 평범한 기성세대 탓이 아니다.

기성세대의 대다수는 자식의 삶이 나보다 낫기를 바라며 저임

금·장시간 노동을 마다하지 않았던 자본주의의 또 다른 희생자일 뿐이다. 그런 그들이 이제는 부모에게서 경제적 독립을 하지 못하는 청년 ‘갠저루족’을 부양해야 할 부담마저 지고 있다.

청년 실업과 빈곤 문제를 세대 탓으로 보면, 기성세대의 양보를 대안으로 여기기 쉽다. 그러나 좋은 취지라 해도 이런 대안은 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문제를 야기한다.

가령 일부 공공부문 노동조합은 사측에 신규 채용을 요구하면서 대신 기존 노동자의 임금 인상 포기과 같은 양보를 제안했다. 그러나 이런 타협은 충분한 청년 채용은 보장하지 못하면서, 정작 청년 일자리 제공에 진짜 책임이 있는 정부와 사측에 면죄부만 주는 결과를 낳기 쉽다.

MZ세대와 노동조합

최근 일부 언론은 MZ세대가 기존 노동조합에 거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로 단결하기 어렵다는 식으로 종종 보도한다. 얼마 전 항의 행동을 벌인 스타벅스 노동자들이 민주노총과 거리를 둔 것이 그 사례로 언급된다.

하지만 노동조합에 대한 MZ세대의 태도는 일면적이고 않고 불균등하다. 많은 청년이 박근혜 퇴진 운동 이후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것만 봐도 그렇다.

그러나 일부 청년이 기존 노동조합에 대해 불신을 드러낸 일은 국제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여러 번 있었다. 예컨대 스페인의 ‘분노한 사람들’ 운동에서 그런 경향이 강했다.

사실 청년들의 불신은 기존 노동조합의 지도자들이 취한 부문주의적 태도나 배신 등에 대한 반발 성격인 경우가 많았다.

노동조합은 때로 청년들을 조직하고 청년들의 처지 개선에 관심을 갖지만, 부문주의와 개혁주의의 성격 때문에 노동계급을 하나로 단결시키는 구실을 일관되게 하지 못하고, 청년 문제에서도 한계를 드러내곤 한다.

예컨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일부 노동조합 지도자는 조합원의 조건을 방어한답시고 미래 신규 사원의 임금과 복지를 삭감하는 타협을 종종 해 왔다. 완성차 공장에 도입된 이중 임금제나, 신규 입사자의 수령 시기를 늦추거나 액수를 깎은 공무원연

금 개악이 그런 사례다. 정부의 탄력 근로제 확대 공격에 대해서 일부 산별노조 지도자가 ‘우리는 단협으로 막을 수 있다’며 진지하게 투쟁을 조직하지 않은 것도 미조직·청년 노동자들의 처지를 외면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타협과 외면은 결국 기존 노동자들의 조건에도 하락 압박을 가하고, 청년과 노동조합 사이에 반목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둘 모두에게 해롭다.**

또한, 지난 몇 년 사이에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 주요 세력들이 청년층이 민감하게 여긴 쟁점들에서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청년들이 크게 분노한 조국 사태에서 민주노총은 침묵했다.

노동조합이 청년 문제를 중시하고 이들을 조직하려 애쓰는 건 좋은 일이다. 그러나 노동조합이냐 아니냐 같은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청년들의 정당한 분노를 적극 지지하고, 이들의 저항을 충분히 뒷받침하는 속에서 신임을 얻는 것이다. 청년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여러 쟁점과 운동, 예컨대 기후 운동이나 여러 차별 반대 운동에도 노동조합이 자신의 조합원에게 참가를 적극 호소하는 게 필요하다.

노동조합의 부문주의적인 성격에 맞서 논쟁하고 토론하며 노동조합이 청년 문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혁명적 좌파의 몫일 것이다.

자본주의에 맞선 대안

오늘날 평범한 청년들은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가장 강렬하게 경험하고 있는 세대라고 할 수 있다. 실업과 일자리 불안정, 그로 인한 빈곤과 불평등 심화가 그것이다. 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물려받은 지구는 심각한 기후 위기에 놓여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본주의의 우선순위에 도전해야 한다. 부를 복지 확대에 쓰도록 요구하고, 군비 증강 대신 팬참은 일자리를 마련하라고 해야 한다. 그러려면 자본의 논리에 맞서는 광범한 투쟁이 필요하다. 기후 위기도 자본주의와 다른 근본적인 변화 없이 저지할 수 없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 운동에 나선 청년들은 급진화의 가능성을 보여 줬다.

그러나 **이런 저항이 성공하려면 특정 세대, 특정 부문만 참여하는 것으로 부족하다. 청년과 중장년 노동계급이 단결해야 거대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한편, 노동자주의 경향이 있는 일부 좌파는 소위 ‘상위권’ 대학 청년들의 불만과 저항을 부गत집 엘리트의 보수적 행동쯤으로 싸잡아 취급하기도 한다. 조국 사태 때 이런 문제가 얼핏 드러났다. 그러면서 ‘상위권’ 대학의 청년이 아니라 지방대 출신의 청년이 급진적 잠재력이 더 크다며 이 둘을 대립시킨다.

그러나 ‘상위권’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이 모두 상층 계급 출신도 아니고, 부모의 계급이나 의식을 그대로 물려받는 것도 아니다. 아직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않은 학생은 특정 계급이라고 볼 수 없고, 종종 이데올로기와 사회 부조리에 민감하다. ‘상위권’ 대학 출신 청년 중에도 급진화하고 노동계급의 규율을 받아들이면서 노동계급의 운동에 헌신하게 된 사람도 많다.

이처럼 출신 대학이나 사는 곳 등을 기준으로 청년들을 구분해 서로 대립시키는 관점은 투쟁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해롭다.

청년층의 조건과 특징을 이해하고, 청년과 노동자 투쟁의 관계를 알아야 한다.

예컨대, 프랑스에서 1968년 반란 물결이 터져 나왔을 때, 프랑스 공산당을 비롯한 좌파 지도자들조차 학생들의 저항을 “부गत집 자식들”의 배부른 투쟁이라며 깎아내렸다. 당시 투쟁은 권위주의와 열악한 교육 조건 등에 불만이 쌓인 ‘상위권’ 대학 학생들이 시작했지만, 이들의 투쟁에 공감한 노동계급 배경 청년의 비중이 높은 대학으로 확산됐다. 또, 청년들의 저항은 노동자들을 크게 자극했고 1000만 명이 참가한 역사상 최대 규모 총파업으로 이어졌다.

청년 빈곤과 불평등을 완화하려면 국가가 재원을 쏟아부어 청년 일자리와 복지를 늘리라고 주장해야 하고, 이런 개혁이 가능하도록 투쟁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저항 속에서 청년과 노동자들이 단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어떤 방식의 복지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지를 충분히 늘리라고 요구하며 싸우는 것이다.

혁명적 좌파는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자본주의와 연결시키고, 그들의 반감과 저항이 반자본주의로 향하도록 애써야 한다.

▶8면으로 이어짐

<노동자 연대> 기본입장

우리는 마르크스주의 전통을 이어 가고자 한다. 이 전통은 처음에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시작했고, 레닌·룩셈부르크·트로츠키가 물려받아 전해 준 전통이다.

이 전통에 따르면, 전쟁·빈곤·기아·착취·차별·환경파괴 등은 자본주의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다. 난민·기후 위기·팬데믹 등도 마찬가지다. 대안은 사회주의 사회이다. 사회주의는 노동자들이 생산수단을 지배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놓고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시스템(이하 체제)이자 이를 구축하기 위한 운동과 사상이다.

소련의 경험은 노동자 혁명이 한 나라에 고립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음을 보여준다. 소련 고립의 결과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국가자본주의였다. 그 뒤 동유럽과 북한, 중국에서 스탈린주의 정당들이 소련과 비슷한 체제를 건설했다. 우리는 북한과 중국의 노동자들이 국가자본주의와 시장에 맞서 싸우는 투쟁을 지지한다.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

노동계급은 사회의 부(富)를 창출하는 데도 그 생산 수단과 방법을 통제하지 못한다. 사회주의는 노동자 권력이고 노동계급의 자력 해방이다. 오직 노동계급 자신의 대규모 투쟁으로써만 차별과 착취로 점철된 체제를 끝낼 수 있다.

노동계급은 사회의 다수이고 사회주의 운동의 주축이다. 노동자들이 생산에서 하는 핵심적 구실 덕분에 그들은 다른 사회세력과 달리, 생산을 멈춰 자본주의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그들 존재 조건의 집단성 덕분에 노동자들은 생산 수단과 생산 방식을 집단적으로 조직해 새 사회의 토대를 놓을 수 있다.

개혁만으로 충분치 못하고 혁명이 필요하다

우리는 노동자와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개혁 투쟁을 지지한다. 조건을 지킬 수 있고, 자신감과 투쟁력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개혁은 차별과 착취, 기후 위기 같은 환경 재앙을 끝내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환경을 체계적으로 파괴한다. 차별과 착취, 환경 재앙이 사라지려면 새 사회가 건설돼야 한다.

그러나 의회를 통해 새 사회로 가는 길은 없다. 지금의 의회·군대·경찰·사법기구를 노동계급이 인수해서 사용할 수 없다. 그런 기구들은 자본주의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져 발전했고,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에 맞서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설계돼 있다. 지금의 체제는 수리하거나 개혁할 수 없고, 해체되고 없어져야 한다.

노동계급에게는 전혀 다른 종류의 국가가 필요하다. 노동자들이 선출한 대표자들로 이뤄진 노동자 평의회를 기반으로 한 노동자 국가가 그것이다.

의회 활동은 기껏해야 현 체제를 반대하는 선전에 쓸모 있을 뿐이다. 물론 우리는 공직선거에서 자본가 정당의 후보가 아니라 진보·좌파 후보를 지지한다. 또한 자본가 정당들의 공식 정치 지배로부터 독립을 촉진하는 정치 활동을 지지한다.

그러나 지금의 체제를 없앨 수 있는 것은 노동자들 자신의 대규모 행동뿐이다.

국제주의

자본주의는 세계 체제이고, 세계 노동계급은 전쟁, 기아, 기후 위기, 팬데믹 같은 국제적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유일한 사회세력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운동은 국제적이어야 하고 만국의 노동자를 단결시켜야 한다. 역사를 보면, 외교라는 수단을 통해 제국주의간 갈등을 해결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 대신 다른 나라 노동

자들과 연대해야 한다. 반대로 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의 노동자들과 대립시키는 것 일체를 반대해야 한다.

우리는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열강의 세계 지배와 이를 위한 그들의 각축과 전쟁을 반대한다. 그러므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서 어느 편도 지지하지 않는다. 북한 핵무기는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 패권을 유지하는 데 이용하는 핑계일 뿐이고, 진정한 쟁점과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 등 서방의 북한 간섭과 압박을 반대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하에서 억압받는 민족들의 자결권을 지지한다. 또한 민족자결에 반해 제국주의에 의해 분단된 한민족의 재통일을 지지한다. 남북한의 주민은 자신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통일할 권리가 있다.

평등과 해방

자본주의는 민족, 인종, 젠더, 섹슈얼리티, 고용형태(정규직/비정규직), 그 밖의 다른 차이들로 노동계급을 분열시킨다. 우리는 여성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평등을 지지한다. 우리는 여성이 낙태를 선택할 권리를 전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성소수자 차별과 천대를 반대한다.

우리는 인종차별을 반대하고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유입 역제를 반대한다. 특히, 우리는 거짓에 근거해 비난받고 있는 무슬림에 대한 천대와 혐오를 반대한다. 우리는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등 차별과 천대를 받는 집단 모두가 권리를 누리기 위해 조직하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시민적·정치적 권리 제한을 반대한다.

갖가지 형태의 차별에 반대하는 민주주의적 투쟁은 사회주의적 투쟁의 필수 불가결한 부분인 한편, 노동자 권력(사회주의) 없이는 차별로부터의 해방(민주주의)이 불가능하다.

노동조합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정치적 조건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민주적이고 전투적이며 계급투쟁적인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하며, 계급협력주의를 거부한다. 또한 우리는 정치적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한다. 즉, 노동조합 운동은 차별과 부당함에 반대하는 투쟁 일체를 옹호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착취 자체를 반대하지 않고 착취의 결과에 저항하는 조직이다. 그래서 노조 지도층의 역할은 사용자와 협상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끝내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싸울 땐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노동자들을 배신하면 그들에게서 독립적으로 투쟁할 수 있도록 현장 기반 운동이 건설돼야 한다.

혁명적 당

노동자 혁명이 성공하려면 노동계급의 가장 선진적인 부분이 혁명적 당으로 조직돼야 한다. 그런 정당은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일상적 저항 조직들 안에서 활동함으로써만 건설될 수 있다.

노동조합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혁명적 조직이 별도로 필요하다.

운동 내의 비혁명적 경향들을 그쳐 비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개혁주의 지도자들과의 공동 활동을 통해 다른 노동자들에게 사회주의 정치가 당면 투쟁과 무관하지 않음을 실제로 입증해야 한다. 공동전선을 통해 혁명적 사상과 실천의 우수함을 모든 노동자들에게 종파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보여 줘야 한다.

우리는 이런 당의 초석을 놓으려 무진애를 쓰고 있다. 위에서 설명된 우리의 기본 입장이 대체로 수긍되면 우리와 함께합시다.



▶7면에서 이어짐

청년·학생들의 생생한 목소리(청중 토론)

“저는 얼마 전까지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였다가 지금은 실업자입니다.

청년들이 고통받는 이유는 개인의 탓이 아닙니다. 개별적 노력이나 스펙 쌓기를 통해서 일부는 좀더 좋은 직장에 취직하거나 승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청년 실업이나, 소외, 고통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부나 언론은 청년들에게 ‘일자리는 충분히 많으니까 대기업 욕심 그만 부리고 주체 파악해서 중소기업으로 취직하라’ 하고 말합니다.

저는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2년 동안 일하면 1300만원 목돈을 더 얻어 주는 정부의 청년 정책인 청년내일채용공제를 했습니다. 중간에 그만두면 그간 적립된 돈을 도로 가져가서 [2년 동안] 꼼짝없이 노예처럼 일해야 했습니다. 청년내일채용공제를 빌미로 사장은 저임금을 정당화했습니다.

정부의 이런 정책은 청년들 잘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산업예비군인 청년들을 저임금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려는 것입니다.

청년의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저는 회사에 다니면서 사장들에게 괴롭힘 당한 뒤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퇴사한 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불안 증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인들 중에서도 직장 스트레스, 취업 준비, 주거 문제 등으로 항불안제나 항우울제를 복용하는 사람이 상당합니다.

오죽하면 청년 노동자인 우울증 환자의 이야기를 다룬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와 같은 부류의 책이 청년층에서 인기를 얻정 끝났겠습니까?

[청년의] 정신 건강 문제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취업이 안 돼 고통스럽고, 저임금 일자리뿐이고, 막상 힘들게 들어간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정부의 청년 정책에만 기대다면 이런 상황은 되풀이될 것입니다. 청년 불평등 문제는 정규직, 비정규직, 청년, 기성세대가 단결한 투쟁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청년

“저는 노동자연대TV를 애청하는 대학생입니다. 청년의 주거권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청년들의 주거가 경제 위기와 함께 매우 열악해져 왔습니다. 청년의 평균 주거 면적은 가뜰이나 비좁은데 지난 10년 동안 2평이나 줄었습니다[2008년 평균 약 11평에서 2018년 8.6평]. 청년의 전체 소득에서 임대료 비중은 지난 수년간 계속 올랐고, 최저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주택에 사는 청년 가구가 전체 평균의 2배에 달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이 대안이 돼야겠지만, 현재 공공임대주택은 물량이 너무 적고, 면적도 코딱지 만합니다. 위치나 경장률 등을 따져 보면, 사실상 시장의 여느 부동산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청년들에게 지금 한국은 너무나도 불공정하고 불공평하고 견뎌내기 힘든 사회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4년 동안 ‘공정’, ‘공정’ 외쳐 왔지만, 말잔치만 벌였을 뿐,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킨 주범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라난 한명이 홍준표나 이준석 같은 우파가 20대 사이에서 지지를 받게 된 토양이 됐습니다.

청년들이 겪는 여러 문제는 단지 청년만이 아니라 노동계급과 그 자녀들이 겪는 문제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노동자 투쟁이 공정담론을 넘어서 민주적이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랑스 노란 조끼 운동은 극심한 계급적 불만이 대중 항쟁으로 얼마든지 빠르게 변화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새롭게 투쟁에 뛰어드는 청년과 노동자들의 쟁점을 살펴서, 운동이 벌어졌을 때 망설임 없이 뛰어들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20대 대학생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20대 청년입니다. 청년들의 자살과 자본주의에 관해 얘기하고 싶습니다.

최근 발표된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한국은 자살률이 높는데 그중에서도 20대 자살률 증가 폭이 높습니다.

20대 남성의 자살률은 여전히 높고, 20대 여성 자살률의 증가 폭이 매우 큼니다. 이는 코로나 이후 타격을 받은 음식숙박업, 도소매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에 많이 종사하던 2030 여성들의 실업과 큰 연관이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일하던 개인 카페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사장은] 코로나를 핑계로 대면서 인건비 때문에 적자가 난다면서 알바생을 모두 해고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청년이 실업 상태에 놓이면서 큰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입니다. 앞으로 미래마저 희망이 없다고 느끼면 정신적 질병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엥겔스 말을 인용하자면, 청년들은 “어떤 도피 수단도 없는 처참한 상태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스스로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기업에 돈을 쏟아붓고 있죠. 청년들의 자살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에게 지원과 복지를 늘리라고 주장하면서도, 자본주의 자체가 경제 위기를 내재하고 있고 코로나 같은 심각한 전염병을 만들면서 사람들을 빈곤과 고립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혁명 속에서 사람들이 자신감을 얻고 삶의 희망을 느꼈던 역사도 언급하면서 투쟁을 통해 함께 자본주의를 끝장내자고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카페에서 일하다 해고된 청년

이 밖에도 노동계급 기성세대를 옹호하며 세대가 아니라 계급적 단결이 중요하다는 의견, 이재명과 심상정의 청년 정책의 의의와 한계, 문재인 정부가 키운 교육 불평등 폭로 등 여러 발언이 있었다.

노동자연대TV 유튜브에서 생생한 청중 토론을 포함한 토론회 전체 영상을 볼 수 있다.

토론회 영상 보기



무인화 기술의 발달로 자본주의는 노동자 없이 굴러가게 될까?

샘 오드

인공지능과 자동화 기술의 발달로 노동이 소멸한다는 주장이 종종 제기된다. 대형마트 등에 무인 계산대가 들어서고, 제조 과정에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등이 도입되면서, 노동이 '죽아나가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러나 노동자 없이 굴러가는 자본주의는 불가능하다. 그 이유를 살펴본다.

아마존 회장 제프 베이조스가 반화가로 그의 제목을 넓히고 있다.

[신선식품 매장인] 아마존 프레시가 이미 런던 전역에 매장 6곳을 열었고, 곧 영국 전역에 30개의 매장을 열 예정이다. 그런데 다른 마트와는 다르게 아마존 프레시에는 계산원이 한 명도 없다.

앱을 실행하고 매장에 가서 상품을 집어 들고 매장 밖으로 나오면 아마존은 자동으로 비용을 청구한다.

이런 반(半)자동화 시스템에는 아마존이 '저스트 워크 아웃' [그냥 걸어 나 오라]이라고 홍보하는 기술이 사용된다. 이는 고객이 진열대에서 물건을 집어 드는 것을 수많은 카메라로 감지하고 추적하는 기술이다.

자본가들은 이것이 전도유망한 기술이 될지도 모른다고 희망을 건다.

경제지 《포브스》는 이렇게 보도했다. "이 기술이 확장성을 갖는 데 성공한다면 곳곳에서 무인 식료품 매장을 열 수 있을 것이다."

"아마존의 식료품 매장 업계 진출은 업계 전체가 더 많은 디지털 솔루션을 채택하고, 단지 상품이 아니라 경험에 초점을 맞추게 만들 것이다."

자동화는 소매업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그리고 베이조스 같은 사용자들은 바로 이 점을 중요하게 여긴다.

아마존은 아스다[영국의 마트 체인 업체], 테스코[글로벌 대형 유통업체]의 '오프라인' 매장들과 경쟁하며 되도록 많은 이윤을 얻으려 한다. 베이조스는 이런 신기술에 투자하고 인건비를 절감해서 경쟁자들을 약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노동자 없는 생산?

자본주의가 존재해 온 기간의 거의 대부분 동안 자본가들은 되도록 가장 적은 노동자를 사용하거나 전혀 사용하지 않는 생산을 꿈꿨다.

자동차 기업주 헨리 포드가 불평했듯이, 자본가들은 작업에 필요한 "두 손을 고용할 때마다 인간을 얻게 된다."

우선, 자본가들은 인력 감축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이윤을 극대화하려 한다. 많은 액수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계는 쉬는 시간이나 유급 병가가 필요 없다. 또, 당연히 성가신 노조나 파업도 걱정할 필요 없다.

그러나 아무리 이렇게 최선을 다해

도 자본가들은 언제나 자신이 인간의 노동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온라인 쇼핑을 보라. 온라인 쇼핑이 소매업 일자리의 종말을 '예고'했던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온라인 쇼핑 시장의 성장은 다른 부문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대규모로 창출했다. 현재 온라인 쇼핑 산업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수많은 배송 노동자들과 창고 노동자들에게 의존하고 있다.

베이조스는 자신의 매장에 계산원을 두지 않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매장으로 식품을 운송하고, 선반에 상품을 진열할 사람은 여전히 필요하다. 이런 사람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아마존은 애초에 식품을 생산한 사람들의 노동에 의존한다.

새로운 '무인화' 기술을 프로그래밍하고 유지·보수하는 사람들과 이에 필요한 것을 제조하는 사람들에 대한 의존은 말할 것도 없다.

결국 자본가들에게는 언제나 인간의 노동이 필요하다. 인간의 노동이야말로 상품에 가치를 부여하고 자본가들이 이윤을 축적할 수 있게 한다.

애당초 인간의 노동이 수행되지 않는다면 원료는 계속 땅 속에 묻혀 있을 것이다.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아무것도 판매되지 않을 것이다. 인간을 대체한다는 기계들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카를 마르크스는 상품을 생산하는 데 들어간 사회적 평균 노동시간이 그 상품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이것은 가격에 반영된다.

가치

흔히 자본가들은 상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노동의 양을 줄이면 더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렇게 되면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이 생산해 경쟁 기업보다 더 싸게 상품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별 자본가들의 관점에서 이는 합리적이다. 언뜻 보면, 경쟁자들보다 더 많은 이윤을 낼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자본가들이 하는 이 모든 행동들은 그들이 판매하는 상품의 가치를 줄인다. 더 적은 시간으로 상품을 생산하게 되기 때문이다.

새 기술에 투자하는 것은 과거에 그것을 만드는 데 들인 노동에 대한 비용을 치르는 것과 같다. 마르크스는 이 과거의 노동을 "죽은 노동"이라고 불렀다.

자본가들은 기술과 죽은 노동에 더 많은 돈을 쓰면서, 그 대가로 돌아오는 이윤을 결국 조금씩 먹어 들어간다. 마르크스는 이를 이윤을 저하 경향이라고 불렀다. 이것이 모든 경제 위기의 근저에 있다.

자본가들이 이렇게 잠식된 이윤을 메우는 한 가지 방법은 산 노동, 즉 실제 노동자에게서 더 많은 가치를 쥐어



계산원 노동자 없는 매장? 그렇다면 진열대는 누가 채우는가? 애초에 식품은 누가 생산하는가? 최근 영국에 개장한 아마존 프레시 매장

짜 내는 것이다.

자본가는 노동자가 생산한 가치의 일부분을 노동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는 자신들이 챙긴다.(마르크스는 이를 "잉여가치"라고 했다.) 따라서 자본가에게는 노동자가 되도록 많이 생산하게 하고 되도록 적은 임금을 주는 것이 득이 된다.

그래서 아마존 창고 노동자들과 배송 노동자들은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면서 목표치를 달성하라는 압박을 끊임없이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또한 노동자에게 힘을 가져다준다. 노동자들의 노동이 이윤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일을 멈춰서 시스템을 마비시킬 수 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자신의 무덤을 파는 자들을 낳는다"고 말한 것이다.

아마존 창고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서거나 운송 노동자들이 운송을 거부하면 어떤 혼란이 일어날 지 상상해 보라.

"저스트 워크 아웃" 기술을 뒷받침하는 IT 노동자들이 시스템을 업데이트 않거나 유지·보수를 하지 않기로 해 상품 판매 대금이 회수되지 않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자본가들과 노동자들의 사이의 이런 충돌, 적어도 이런 충돌의 가능성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자본가는 노동자들에게 언제나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이 생산하라고 강요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항상 새 기술을 모색해 왔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역사 내내, 이러한 착취는 노동자들과 자본가들의 공공연한 싸움으로 거듭 분출했다.

때때로 자본가들은 기술을 이용해 한 무리의 노동자들을 해고할 수 있을지라도, 많은 경우 그러면서 다른 부문에서 자신의 무덤을 팔 사람들을 만들어 내 왔을 뿐이다.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2776호 / 번역 김미령

고객 정보라는 거대한 새 시장

아마존 프레시가 판매하는 진정한 상품은 우리의 개인 정보 데이터인가? 아마존의 "저스트 워크 아웃" 기술을 둘러싸고 사생활과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영국의 개인 정보 보호 운동 단체인] 빅브라더 위치의 운영자 실키 칼로는 아마존 프레시가 "디스토피아적인 철저한 감시 속에서 이뤄지는 쇼핑 경험을 제공한다"고 말한다. 아마존은 강도 높은 고객 추적으로 다른 어떤 소매 업체들보다 더 막대한 개인 데이터를 축적할 것입니다."

"고객들은 마땅히 이런 기록과 통계들이 누구에 의해 어떻게 이용되는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은 엄청난 수익을 거두게 해 준다.

고객 추적

아마존은 개인정보와 신기술을 판매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이윤을 얻을 수 있어서 식료품 판매로 이윤을 얻는 데에는 사실 그다지 큰 관심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그러나 이것이 소비자와 노동자들에게 가져올 결과는 무엇인가?

아마존은 감시 시스템으로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에 전혀 거리낌이 없었다.

배달 노동자들은 카메라와 GPS 시스템(위성위치시스템)을 통해 끊임없이 추적·감시당한다. 창고 노동자들도 소프트웨어, 열 화상

카메라, 손목 밴드를 통해 감시당한다.

비슷한 시스템이 아마존 프레시 노동자들을 감시하는 데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감시

이민자, 난민, 활동가 등 국가와 감시를 두려워할 법한 사람들은 아마존도 멀리하고 싶어 할지도 모른다.

충분히 그럴 만하다. 아마존은 스마트 홈 보안업체인 '링(Ring)'을 소유하고 있다. 그런데 이 업체는 경찰에 얼굴 인식 데이터를 제공해 왔다.

많은 경우 터무니없이 결합투성이고 부정확한 이런 데이터들은 다른 인종보다 특히 흑인들을 괴롭히거나 체포하는 데 이용된다.

국가와 아마존 프레시가 특정인들을 탄압하는 데에서 협력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시스템이 해킹당해 개인 정보가 알 수 없는 개인들에게 넘어갈 수도 있다.

우리는 아마존 프레시 매장들이 고객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 알아내려고 고객의 위치와 움직임을 면밀히 추적할 것임을 안다.

그러나 아마존이 정확히 어떤 정보를 수집해서 보관하고 판매할지는 모른다.

그래서 소비자들과 노동자들은 자신의 정보가 수집되고 판매되는지 알 수도 없고 동의할 수 있는 방법조차 없다.

SPC 사용자 측의 인력충원 약속 파기로 노동자들 파업하다

박설

SPC 화물 노동자들이 전면 파업을 시작한 지 한 달째 되던 10월 15일, 민주노총은 전국 25개 주요 거점에서 SPC의 노조 탄압을 규탄했다.

SPC그룹 측은 광주를 비롯해 경기, 원주, 대구, 양산 등 곳곳에서 노동자들과 한 합의를 밥 먹듯 뒤집어 불만을 사 왔다. 9월 초 광주 노동자들이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하자, 사측은 화물연대 조합원 전원(36명)을 사실상 해고했다.

최근에는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막심하다며 운송사 10여 곳에 약 36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운송사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미 노동자들은 지난달 운임(임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도 노동자 파업에 강경 대응하고 있다. 10월 12일 현재 117명이 연행되고 1명이 구속됐다. 경찰의 폭력적 진압 과정에서 수십 명이 크고 작은 부상도 입었다.

SPC 화물 노동자들이 SPC 광주 사니 공장 앞에 집결한 16일에도 경찰은 대체수송 차량들이 물건을 싣고 공장을 빠져 나갈 수 있도록 호송하는 경비대 구실을 했다. 공장 앞 도로에 차벽을 세우고, 투쟁 대열을 밀어내고, 항의하던 노동자들을 연행했다.

방역법을 빌미로 공장 인근까지 가지도 못하게 막아 노동자들은 집회도 49명씩 세 군데로 쪼개져 진행해야 했다. 일부는 집회에 참석하지 못한 채 멀찌감치 떨어져 지켜만 봐야 했다.

“경찰이 SPC 경호원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어딜 가든



10월 16일 SPC 광주 사니 공장 앞에서 시위하는 화물 노동자들

매번 저러니까 정말 화가 끓어오릅니다. 뚫리고 깨지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답답하기도 합니다.”

SPC 세종 공장(밀다원)에서 만났던 성남·원주 노동자들은 “씻지도 못해 꼴이 말이 아니죠?” 하며 기자를 반겼다. “회사가 가족들에게까지 연락해 회유하고 월급도 못 갖다 주니까 아내가 이혼하자고도 합니다. 그래도 한번 시작한 싸움, 끝을 봐야죠, 이대로 들어가 노예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SPC 광주지회 노동자들은 “차량 2대 늘려달라는 게 해고까지 당할 일이나” 하며 불만을 터뜨렸다. “8개월 동안 협상해서 어렵사리 2대 증차를 합의했습니다. 사실 그것도 우리가 많이 양보한 겁니다. 10년 전에는 한 사람당 점포 8곳에 배송했는데, 지금은 17~18곳을 맡고 있어요. 그런데도 사측은 갑자기

배차 계획을 한국노총과 합의해 오라면서 합의를 깨버렸습니다.”

“회사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는 식입니다. 이참에 노조를 죽이려는 것 같아요. 정부가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하면서 탄압하지, 코로나로 집회도 못하게 하지. 그러니까 지금이 좋은 기회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투쟁의 효과

문재인 정부는 지난 상반기 택배 파업, 민주노총 노동자대회 등 코로나 19로 주춤하던 노동자 투쟁이 회복되는 조짐의 확산을 차단하려고 노동 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다. SPC 화물 노동자 파업에 경찰 병력을 집중 배치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나 SPC 화물 노동자들은 거센 탄압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파업과 시위

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의 탄압이 투쟁을 잠재우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들이 SPC 사측에 맞서 저항을 지속하면서, SPC그룹의 위생 관리와 노조 탄압 문제 등도 속속 폭로되고 있다. 가령, SPC 던킨도너츠에서는 내부 고발자에 의해 생산 과정에서 누런 기름때가 발견되는 등 위생 관리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사측은 “영상 조작” 운운하며 반격을 시도했지만, 식품안전처의 현장 점검에서도 비위생적 생산 과정이 적발됐다. 최근에는 도너츠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 등 제보도 이어졌다.

SPC그룹 내 계열사 곳곳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에 대한 승진 차별, 노조 탈퇴 압박 등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터져 나온다.

SPC 사측은 대외적으로는 자신들

과 관계 없는 문제라고 선을 그었지만, 최근 “철저한 위생관리 시스템 가동”, “ESG 경영(친환경 사회적 공헌) 전격 도입”, “가맹점 피해 지원” 등의 대책을 잇따라 내놓았다. 국내외에서 공격적으로 사업 분야를 넓혀 가고 있는 식품기업으로서 이미지 개선에 상당히 신경 쓰는 모양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파업이 지속되는 것은 사측에게 부담스러운 일일 것이다. 10월 20일 민주노총 파업, 이후 예고된 화물연대 파업 등에서 SPC의 노조 탄압 문제가 크게 쟁점화 되고 연대가 확대되는 것만은 피하고 싶을 것이다. 최근 사측이 일부 운수사를 내세워 협상을 조율하기 시작한 배경이다.

노동자들은 사측이 손짓을 한 것에 기대를 걸면서도 그것이 제스처 수준에 그치고 시간만 질질 끌려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상남 SPC 광주지회 총무부장은 “지금이야말로 연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투쟁에 함께 준 동지들이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조합원들이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집중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더 많은 연대가 필요합니다.”

민주노총은 10월 20일 하루 파업 이후에도 SPC 화물 노동자 투쟁에 연대를 확대해야 한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의 온전한 시행을 위해 10월 20일까지 쟁의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이번 파업을 SPC 화물 노동자 투쟁과 적극 결합시켜야 한다. 화물연대가 늦지 않게 파업에 돌입하는 등 SPC 화물 투쟁에 연대해 성과를 낸다면, 안전운임제 투쟁에도 자신감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

파업 준비에 나선 화물연대 노동자들 “안전운임제는 최소한의 생계 안전 장치”

박설·양선경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전면 적용 확대 등을 요구하며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파업 날짜, 기간 등은 찬반투표 이후 확정한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제와 유사한 제도다. 최소한의 “적정” 운송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운임(임금) 하한선을 정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

화물 노동자들은 턱없이 낮은 운임으로 오랫동안 생활고에 시달려 왔다. 낮은 운임은 노동자들을 과로, 과속, 과적 운행으로 내모는 주범이기도 하다.

실제로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 사고의 75퍼센트가 화물차이고, 사망자

의 53퍼센트가 화물 노동자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보면, 화물차의 고속도로 교통사고 치사율은 전체 치사율보다 약 두 배나 높았다. 안전운임제 시행은 노동자들뿐 아니라 도로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현재 안전운임제는 컨테이너, BCT(시멘트) 등 2개 품목에만 적용된다. 전체 화물 차량 40만여 대 중 2만 6000대(6.5퍼센트)가량에 불과하다. 그조차 지난해부터 내년 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만 일몰제로 시행되고 있다.

2018년 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당시 화주들과 우파들의 안전운임제 도입 반대를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수용한 결과다. 안전운임제는 문

재인의 대선 공약이었다.

내년 말 제도 시행 종료를 앞두고 (무역협회나 대기업들로 주로 대표되는) 화주들은 안전운임제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도 제도 시행 연장에 열의가 없다. 화물연대 한 지역본부장은 “안전운임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지만, 정권이 끝나가는 지금 시점에서 전혀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제 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물동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노동자들에게 안전운임제가 매우 절실한 요구다.

경남 지역에서 컨테이너 차량을 운전하는 노동자들은 말했다. “안전운임제가 도입되고 나서 그나마 생활이 좀 나아졌습니다. 수입이 20퍼센트가량 오르고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쉴 수도

있게 됐는데, 이걸 도로 빼앗겠다는 겁니다.”

한국안전운임연구단이 올해 초 실시한 조사 결과,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화물차 운전자의 순수익은 제도 시행 전보다 월 24만 원가량 올랐다. 화물차 사고 원인의 80퍼센트를 차지하는 졸음 운전이 20퍼센트 줄고, 과속·과적이 각각 16퍼센트, 10퍼센트씩 줄어드는 효과도 있었다.

김성진 화물연대 구미 금강지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일몰제를 폐지시키려면 올해부터 투쟁해야지, 내년에 닥쳐서 하면 늦습니다. (안전운임제가 부분 시행될 때도) 2019년에 합의하고 지난해에야 시작했는데, 아직 제대로 자리도 잡지 못한 걸 보세요. 무역협회나 대한상공회의소 같은 기업 대표들은 운송료 협상

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도 책임이 있습니다. 안 되면 강제로라도 해야 하는데 손을 놓고 있습니다.”

권영한 화물연대 한국타이어지회장은 “일반 화물 차량, 카고 차량들의 경우 노동자들의 운임, 조건 수준이 더 열악하다”며 “안전운임제를 전 차종으로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몇 년간 화물연대 조합원 수는 1000명 이상 증가했다. 워낙 열악한 조건에서 불안감이 커져 왔기 때문일 것이다. 이전의 투쟁들이 난긴 성과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화물 노동자들은 투쟁 잠재력이 여전히 크다. 세계적 물류 대란 속에 화물연대가 단결해 운송에 차질을 준다면, 정부와 사용자들의 양보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CJ대한통운 택배 투쟁

임금 삭감에 저항하는 CJ대한통운 노동자들

신정환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 노동자들이 10월 15일부터 신선식품 배송을 중단하는 부분 파업을 시작했다. 10월 20일에는 민주노총 파업에 참가한다.

노조는 CJ대한통운 사측이 사회적 합의를 파기했다고 규탄하고, 노조 인정도 요구하고 있다.

지난 6월 택배 노사와 정부·여당은 2차 사회적 합의에서 과로사 방지를 위해 내년부터 택배 기사들에게 분류작업을 면제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택배 요금을 인상(개당 170원)하여 해당 재원 마련하며, 비용을 택배 기사들에게 전가하지 않는다고 합의문에 명시했다.

노조는 최근 CJ대한통운이 시행하고 있는 요금 인상분 사용 방안에 따르면, 사측이 인상분 중 고작 56원만을 투입한다고 폭로했다. 대리점에 지급되는 분류인력 인건비와 사회보험료가(사회적 합의 내용보다) 부족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대리점주들이 분류인력 충원을 꺼려 할 것이다. 원청의 지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려면 자신들의 이윤 몫을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도 사측은 인건비를 아끼려고 분류인력의 근무시간을 최소 2시간



도다시 사회적 합의 파기 꿈수 10월 14일 투쟁 선포 기자회견

이상 적게 운영해 여전히 택배 기사들이 분류 작업 일부를 해야 하는 실정이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내년부터 분류작업에서 완전히 손을 뗄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다.

무엇보다 CJ대한통운 측은 10월부터 택배 기사들의 집화(택배 수거) 수수료(임금)까지 삭감했다. 유성욱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장은 말했다. “집화 비중이 높은 노동자들은 월 평균 4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삭감됩니다. 특히 전체 집화 물량의

70~80퍼센트를 차지하는 수도권 택배 기사들에게 타격이 상당합니다.”

이 때문에 노동자들의 불만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 김포지회 노동자들은 분통을 터뜨리며 말했다. “CJ대한통운은 2018년에 분류 자동설비 비용을 회수한다며 수수료를 개당 20원씩 삭감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번 또 분류 인건비 조차 충분히 지급하지 않고, 오히려 수수료를 삭감한다니 말도 안 됩니다. 결국, 피땀 흘려 번 우리의 돈으로 생색을 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정부도 이같은 상황을 외면하고 있다. 2차 사회적 합의문에는 정부가 “사회적 합의사항 이행을 점검, 관리한다”는 문구가 버젓이 있는데도 말이다.

국토교통부는 CJ대한통운이 ‘사회적 합의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말하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도 택배 노동자 과로사 해결 합의 이행 문제를 국정감사에서 다뤄 달라는 택배노조 지도부의 요구에 침묵하며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이번 투쟁에서 노조 인정도 중요한

요구다. CJ대한통운과 대리점연합회는 노조 설립 5년이 되도록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 최근 택배노조에 대한 맹공격이 벌어질 때 친기업·보수 언론들도 핵심적으로 택배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문제 삼았다. 택배 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청과 대리점도 사용자 의무가 없다는 논리였다.

노조 인정

그러나 노동부 중앙노동위는 원청과 대리점 모두 사용자로서 교섭 의무가 있다고 판정했다. 원청 사업주인 CJ대한통운이 대리점과 함께 택배 기사의 단체교섭에서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보고,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것이다.

노조 활동 시간 보장, 사무실 제공, 조합비 원천 공제 등 노조 활동을 보장하라는 요구는 정당하다.

대리점주들이 과도하게 수수료를 떼가는 문제나 대리점주가 사망한 김포장기대리점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건 악화 공격 등의 문제 해결도 요구하고 있다. 부산과 김포 등의 노동자들은 이번 부분파업보다 앞서 투쟁해 왔다.

노조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파업의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부분파업을 발판으로 택배 노동자들이 투쟁을 확대해 성과를 내길 바란다.

학교비정규직 파업

교육청 예산 대폭 늘는데도 비정규직 임금은 못 올린다?

서지애 초등학교 교사, 전교조 조합원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83.7퍼센트 찬성으로 10월 20일 민주노총 파업에 나선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역대 최대의 파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임금 차별을 키우고, 필요한 지원을 하지 않는 정부와 교육당국에 항의하고 있다. 이들은 급식실 인원 총원, 돌봄전담사 8시간 전일제화, 교육 복지 강화를 요구한다.

교육 예산은 역대 최대로 늘어났지만, 학교비정규직의 내년 임금 인상률은 역대 최악이다.

교육 당국은 최저임금 인상률(1.5퍼센트)이나 공무원 임금 인상률(1.4퍼

센트)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 인상안을 내놨다. 근속수당이나 명절 휴가비 등도 인상하지 않으려 한다.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임금 인상은 사실상 임금 삭감이다.

교육 당국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해당하는 방학 중 비근무자에 대한 생계 대책 요구에도 묵묵부답이다.

반면 올해 각 시도교육청에 지급된 추경 예산만 해도 6조 원 이상이 되고, 내년 지방교육교부금은 11조 원 이상 늘어난다. 올해 예산보다 20퍼센트가 인상된 것으로 역대 최대이다. 그런데도 전체 학교 노동자의 40퍼센트 이상인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쓸 돈은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코로나19 방역 조치 등으로 더욱 악화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약 학생들의 학습 결손, 심리정서적 문제 등이 커지고 있지만, 학생들을 지원하는 교육복지사가 배치된 학교는 14퍼센트에 불과하다. 더구나 교육복지 담당 인력의 처우는 매우 열악하고, 통일된 임금체계조차 없다.

학교 급식 노동자들은 다른 공공기관보다 2~3배나 많은 1인당 식수 인원을 감당하고 있는데다, 코로나19 방역 업무와 시차 배식 등으로 노동강도가 더욱 세졌다. 이로 인해 많은 노동자들이 온갖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린다.

열악한 급식실 환경 때문에 노동자

들의 폐암 유병률이 국가 암 통계의 24.8배에 이른다. ‘죽음의 급식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동자들은 직업암 전수조사와 환기시설 전면 교체, 급식실 인력 충원을 요구한다.

한편,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학교가 멈출 때에도 계속 돌봄을 제공해 온 돌봄전담사의 83퍼센트가 시간제 노동자들이다. 이 때문에 돌봄전담사들은 짧은 근무시간 동안 돌봄뿐 아니라 돌봄교실 정리, 행정 업무까지 해야 하는 ‘압축 노동’에 시달리고, 수당도 받지 못하는 초과근무를 하고 있다.

정부는 맞벌이 가정의 퇴근 시간에 맞춰 돌봄교실을 오후 7시까지 연장하는 온종일 돌봄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이를 위한 재정 지원에는 인색하다.

말로는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노동시간 연장’과 ‘교사들의 돌봄 업무 해방’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늘어난 돌봄교실을 돌봄전담사의 유연 근무로 메우려는 것이다. 내년 예산이 대폭 늘어났지만, 교육청들은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상시전일제화 요구도 외면하고 있다.

코로나19 시대에도 교육을 책임져 온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은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도 꼭 필요한 일이다. 교육 예산이 크게 늘어난 만큼, 정부와 교육청들은 학교비정규직의 처우 개선과 인력 충원에 과감하게 지원해야 한다.

10월 20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한다.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workerssolidarity.org

※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소속

() 직장 () 노조 () 대학교 () 중고등학교 () 기타

회비약정액 ☐ 2만 원 ☐ 3만 원 ☐ 4만 원☐ 5만 원 ☐ 기타 () 원

(회비 기준액은 월 2만 원 이상.

단 대학생은 1만 원 청소년 이주노동자 5천 원 이상)

※ 본인은 위의 정보를 노동자연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입 신청일:

년

월

일

(서명)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노동자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임금 계좌 (예금주 ☞ 레프트미디어)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핸드폰 결제 가능





위드 코로나 재앙의 속죄양, 민주노총 투쟁 탄압 말라

이정원

10월 20일 민주노총의 하루 파업과 집회를 앞두고 정부와 사용자들, 그 언론들이 파업 철회를 거듭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민주노총 투쟁이 11월 초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으로의 전환을 앞두고 감염자가 급증하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탄압하고 있다.

서울시도 "불법 집회가 강행되면 주최자와 참여자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즉시 고발"하고 "확진자가 나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그러나 7월 전국노동자대회 개최를 이유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했을 때 그랬듯이, 코로나 방역은 핑계일 뿐이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방역 정책을 전환하면 확진자가 지금보다 훨씬 늘어날 것이 뻔하다. 더 일찍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다른 나라들에서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 가령 백신 접종률이 70퍼센트 정도 되는 영국에서도 방역을 풀고 나서 하루 확진자가 4만 명으로 치솟고, 하루에 200명씩 죽고 있다. 한국에서도 밀집 시설 이용이나 대면 접촉 규제가 완화되면 확진자 증가는 거의 확실하다.

정부는 의료 인력과 공공의료 시설을 즉각 확충할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동안 겨우 10퍼센트의 공공병원에서 코로나 환자 치료를 전담해 오면서 한계가 드러났고, 1~4차 유행 시기 때마다 병상 부족이 반복됐다.

일상적인 방역 대응에도 대폭의 인력 충원이 시급하다. 인력 충원과 예산 확보 없이 살인적인 노동을 강요하니 사직과 휴직이 늘고, 남은 노동자들의 고통과 부담은 더욱 심해지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

한 달 전에도 인천 지역 보건소에 근무하던 공무원이 업무 과중으로 사망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보건소 공무원 노동자들의 사직이 50퍼센트, 휴직이 40퍼센트 증가했다. 지금도 이런데, 위드 코로나로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면 대처 능력이 더욱 부족할 것은 분명하다.

백신 접종의 효과로 코로나19 사망률이 낮아졌다고 해도 늘어난 환자를 감당할 의료 시설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노인 등 취약계층은 상당한 위험으로 내몰릴 수 있다. 백신이 치명률을 낮췄다고 해도 독감보다 치명률이 3배가 높다는 통계를 봐도 위험 대비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정부가 정작 위드 코로나에 필요한 조처는 불충분하게 대비하면서, 민주노총이 확진자 증가의 주범이 될 것처럼 말하는 것은 노동자 운동 탄압의 명분일 뿐이다.

옥외 집회가 코로나19 감염을 확산시킨다는 주장은 참말이 아니다. 김운 서울대 의대 교수는 이렇게 지적한다.

“사람이 얼마나 밀집해 모이느냐, 계속 마스크를 쓰고 있느냐, 얼마나 장시간 같이 있느냐, 전후에 식사를 하느냐 등이 위험도를 높일 순 있겠지만 집회 자체가 위험도를 높이는 것은 아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도 비슷한 지적을 한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를 한다면 야외 집회에서 감염될 가능성은 매우 매우 낮아요. 야외 감염 확률은 0.1퍼센트 미만이라는 논문들도 있고요.”

따라서 민주노총이 파업과 집회 철회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예정대로 강행하겠다고 밝힌 것은 완전히 옳다.

정의당과 진보당을 비롯한 5개 정당도 “민주노총 총파업 지지 진보정당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를 비판하고 파업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코로나 방역의 잣대를 들이대 집회의 자유를 구속하지 말고,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을 중단할 것이며 여전히 한국사회의 주축 세력인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반면 <경향신문>이 “민주노총의 20일 집회, 위드 코로나 기조 흔들어진 안 된다”(10월 18일 자)는 제목의 사실까지 실어 파업 계획 재고를 촉구한 것은 극도로 소심한 일이다.

희생양

정부와 사용자들, 언론들이 민주노총 투쟁을 비난하는 진정한 이유는 코로나를 이유로 노동자들을 단속해 온 이점이 악화되기 때문이다. 특히, 경총은 민주노총 투쟁이 “산업현장의 노사관계 안정”을 해친다고 우려한다.

사용자들은 최근 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요인으로 경제 회복이 순조로울지가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통제가 이완되면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코로나19와 경제 침체가 지속되면서 일자리를 잃거나 조건 개선 역제를 강요받아 불만이 커져 왔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저임금 등 열악한 조건에 처해 있지만, 불평등은 더 심화되고, 집값 폭등, 실업 위험, 물가 상승으로 인한 실질소득 감소 등으로 불만이 더 커져 왔다.



〈세바시〉제공 기사

9월 30일 민주노총 전국 동시 결의대회(서울 집회)

이에 대해 정부는 고용지표가 회복됐다는 통계를 내세우지만, 제조업 고용 증가는 다시 주춤거리고 있고, 서비스업에서의 고용 회복세는 매우 불안정하다. 이스타 항공을 비롯해 구조조정으로 해고된 노동자들과 마트, 호텔 등 고용불안에 내몰리는 노동자들이 여전히 적지 않다.

정부와 사용자들은 민주노총 투쟁이 자칫 이런 코로나를 이유로 한 사회 통제를 이완케 할까 봐 염포를 놓고 있는 것이다.

파업에 참가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내년 교육예산이 늘어난 만큼 이번에는 제대로 된 임금 인상을 얻어야 한다는 정서가 크다. 문재인 정부 내내 충분한 처우 개선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학비노동자뿐 아니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반에서 임금과 처우 개선이 억제돼 온 것에 불만이 쌓일 대로 쌓여 왔다.

“공무직 노동자 대부분이 기본급은 최저임금이고, 근속수당, 호봉제가 없다. 수당은 그나마 급식비가 정규직과 똑같고 명절상여금은 40만원씩이 전부다. 이러니 우리가 무기계약직을 가짜 정규직, 무기한 비정규직이라고 말하는 [것이다.]”(민주노총 20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 투쟁선포 기자회견문)

노동자들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후에도 그대로인 임금과, 전환자의 4분의 1이 자회사로 전환된 것을

보면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배신감과 억울함, 분노”를 느낀다(위 기자회견문).

국민의힘 등 우파가 반격 수위를 높이고 있는 현 상황에 비춰 봐도 노동자

투쟁은 중요하다. 당면한 조건 개선을 위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변화 염원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우파의 노림수를 물리치는 데서도 노동자 투쟁이 관건이다.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연속 토론 COP26과 기후 운동 ①

기후 위기는 왜 약자에게 더 가혹한가

— 기후 위기와 불평등, 노동계급

10월 28일(목) 오후 8시

발제 **장호종** <노동자 연대> 기자

참가신청 bit.ly/COP26OUT

토론회 진행일: 오후 7시 30분에 유튜브를 접속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참가 신청 하기

연속 토론 ②

기후 위기를 멈추려면 어떤 정치가 필요한가?

11월 11일(목) 오후 8시 발제 마틴 웹슨 영국 환경운동가이자 사회운동가

11월 초 영국에서 2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6)가 열립니다. 이에 맞선 대규모 시위도 있을 예정입니다.

기후 위기의 피해가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되는 상황에서 각국 정부의 대책은 기후 위기를 멈추기는커녕 불평등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1회 토론에서는 기후 위기와 불평등을 해결할 대안은 무엇인지 살펴 봅니다. 2회 토론에서는 영국의 환경운동가이자 사회주의자인 마틴 웹슨을 초청해, 병행한 현장 시위 소식과 함께 국제적 기후 운동 현황을 돌아 보고 기후 위기를 멈추려면 어떤 정치가 필요한지 토론하려 합니다.

문의: 02-2271-2395, 010-4903-2026(코지 가넷)

노동자연대TV

채널에서 지난 온라인 토론회 영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youtube.com/c/노동자연대TV